

---

#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

일시 | 2017년 2월 13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주최 |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의원(국민의당), 추혜선의원(정의당),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

## 프로그램

- 10:00 사회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0:10 피해증언1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KBS 통제**  
성재호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 10:20 피해증언2        법조계에 대한 사찰 및 공작정치**  
송아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10:30 피해증언3        세월호 관련 공작정치**  
장동원 세월호 생존학생 학부모 대표
- 10:40 피해증언4        사이버 및 민간인 사찰**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10:50 피해증언5        청와대의 교육사찰과 전교조 탄압 공작**  
노병섭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사무처장

## 목차

피해증언1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KBS 통제 / 성재호	5
피해증언2	법조계에 대한 사찰 및 공작정치 / 송아람	25
피해증언3	세월호 관련 공작정치 / 장동원 세월호 생존학생 학부모 대표	34
피해증언4	사이버 및 민간인 사찰 / 장여경	55
피해증언5	청와대의 교육 사찰과 전교조 탄압 공작 / 노병섭	67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의해 전모가 드러난 청와대 공작정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서, 그 사안의 심각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에서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제 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여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의 공안기관을 활용할 뿐 아니라, 각 중앙부처까지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공작정치가 우리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자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고자,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를 함께 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 각계는 공작정치에 관한 심증을 형성하면서도, 음모론적인 접근을 지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분석된 김영한 업무일지는 정부가 군부독재 시절에 오래된 관습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적 비판자를 감시·탄압한 것이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질서를 올곧게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금 번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검과 검찰, 국회의 조속한 수사·조사·입법이 조속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피해자 증언대회를 통해서, 김영한 업무일지에 기록된 내용은 단순한 구상이나 메모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피해자 증언대회에서의 이 증언이 ‘공작정치’를 소멸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KBS 통제

---

성재호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 1.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를 통해 드러난 청와대의 KBS 개입, 통제

박근혜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공영방송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 개입과 인사 개입 등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증언과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 수석 등이 직접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 등을 걸어 보도에 개입하고 압력을 가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KBS 사장을 통해 보도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직접적인 개입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가) 세월호 참사 이전의 개입 사례

##### ■ 2013년 5월13일

당시 길환영 KBS 사장이 “오늘부터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 속보’를 1번째로 다루지 말라”고 지시한 가운데 당시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도 전화를 걸어와 ‘대통령 방미 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주문하였다. 당일 메인뉴스인 KBS 9시 뉴스에서 결국 1번째 톱 아이템으로 다른 뉴스가 방송됐다. 여타 SBS나 MBC의 메인뉴스

는 모두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 톱으로 다뤄졌다. 김시곤 국장은 이것이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제작 편집이 늦어져서 발생한 사고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분명치는 않다.

■ 2013년 10월27일

‘청와대 안뜰서 아리랑 공연’ 소식을 당일 KBS 9시 뉴스 맨 마지막 순서인 16번째로 방송기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뉴스가 나가기도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저녁 무렵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청와대 안뜰서 아리랑 공연’을 맨 마지막에 편집한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김시곤 국장이 얘기를 정치부장에게 전하였고, 김환주 정치부장이 이정현 수석에게 전화해 “앞으로 사장이나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하지 말고 정치부장에게 얘기하라”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나) 세월호 참사 사태 당시 개입 사례**

■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KBS 보도 및 인사 개입 일지

세월호 참사 직후 당시 KBS 보도국장이던 김시곤 국장이 세월호를 교통사고에 비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가족들이 KBS와 청와대 앞으로 몰려와 항의하였다. 이 여파로 김시곤 국장이 사임하였고 이 과정에서 KBS에 대한 청와대의 보도 및 인사 개입 실태가 폭로되었다. 결국 노동조합의 파업과 여론에 밀려 KBS 이사회는 당시 김환영 KBS 사장의 해임을 의결처리하였다.

일시	주요 발생 내용
2014. 4. 16.	세월호 참사
2014. 4. 21. 21시~22시 (휴대전화 녹음)	이정현, 김시곤에게 전화해 KBS뉴스9 해경 비판(7건) 보도 거세게 항의
2014. 4. 30. 22시경 (휴대전화 녹음)	이정현, 김시곤에게 전화해 KBS뉴스9에 방송된 해경비판(8건) 보도를 심야뉴스인 KBS뉴스라인에서 방송되지 않도록 삭제 편집 부탁했으나 김시곤은 이른바 립서비스 수준에서 응대하고 뉴스라인에서도 해경 비판(7건) 보도 계속
2014. 5. 5. 14:30	김환영 사장, 휴일임에도 보도본부장실로 임창건 보도본부장 및 김시곤 보도국장, 편집주간, 취재주간 집합시킨 후 해경 비판 (이슈&뉴스 등 심층 보도물) 보도 하지 말라고 지시

2014. 5. 8. 밤	세월호 유가족, KBS 방문해 이른바 '교통사고 비교 발언' 관련 김시곤 보도국장 사과 및 파면 요구
2014. 5. 9. 03시	길환영, 세월호 유가족 항의에 대해 김시곤 보도국장의 해명 기자회견 등 정면 돌파 결정
같은 날 8:00	길환영 등 KBS 임원, 위 결정 재확인
같은 날 오전	박준우·이정현, 세월호 유가족 면담
<b>같은 날 13:25</b>	<b>길환영, 김시곤에게 청와대의 지시라며 사표제출 종용</b>
같은 날 14:00	김시곤, 이른바 '교통사고 비교 발언' 해명 기자회견 및 길환영 사장 부당 보도개입 폭로
같은 날 15:00	길환영,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김시곤 사표 수리 약속
같은 날 15:00	<b>박준우, 박영선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예방한 자리에서 "KBS에 전화한 결과로써 김시곤 KBS 보도국장 사임" 밝혀</b>

■ 2014년 4월21일 21:00~22:00 사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해 KBS 9시 뉴스에서 해경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였다. 다음은 김 국장이 휴대전화로 녹음한 녹취록이다.

▷ 녹취록 RT:7분 24초 (밑줄 부분은 김시곤 국장의 말)

"...라고 치더라도 지금 이 저기 뭐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배에 그 배에 있는 그 최고의 전문가도 운전하고 있는 놈들이 그 뛰어내리라고 명령을 해야 뛰어내리고 지들은 뛰어 내릴 줄은 몰라서 지들은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는데 그걸 해경을 두들겨 패고 그 사람들이 마치 별 문제가 없듯이 해경이 잘 못이나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 이게 아니 그런 위기 상황이라면 아니 이 선배 자기들이 명령을 내려야지 그 멀리서 목소리만 듣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뛰어내려라 소리 안 해 가지고 이 사고가 일어난 겁니까? 아니 이 선배 이게 뭐 일부러 우리가 뭐 해경을 두들겨 패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다른데도 아니고 말이야 이 앞의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 못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나중에 이쪽 거 한 열흘 뒤에 뭔지 밝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해경이 아니라 해경 할애비도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지고 다 작살을 내도 아니 기본적으로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뭉쳐가지고 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해경을 작살을 내면은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어떻게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이게 우리 보도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의도 있어보여요 지금 이거 하는 것 봐보면~ 무슨 의도가 있어요 저희가요~? 이상한 방송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공영방송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니 지금 누구 잘못으로 이 일이 벌어져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번 뛰어 내리라고 했는데 안 뛰어 내렸다고 그걸 가지고 조져대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번 참사를

**놓고서 이걸 면밀히 우리가 분석을 해서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부터 오늘부터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저렇게 사투를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기다가 대고 지금 정부를 그런 식으로 그걸 그것도 본인이 직접 하고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장을 해서 해경을 지금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방송을 멀리서 목소리만 듣고 그런 뛰어내리지 않아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냐고요 **아니 해경에 해경에 그만큼 아니 제발 좀 들어보세요** 씹어 먹든지 갈아 먹든지 며칠 후에 어느 정도 극복한 뒤에 그때 가서는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해경이 아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뭉쳐가지고 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까지 전부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직접적인 잘 못한 현재 드러난 것은 누가 봐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누가 봐도 그때 상황은 그놈들이 말이야 이 놈들이 뛰쳐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상황이었다고 그렇다고 하면 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놈 이면 그놈들한테 잘 못이지 마이크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한 그 놈들이 잘못이지 **아니 일차적인 잘못은 일차적인 잘못은 그 선사하고 선원들한테 있는 것은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야 일차적인 책임은 그쪽에 있고 지금 부차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지난 뒤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진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서서 방송이 지금 해경을 지금 밟아놓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솔직히 방송의 일은 너무 잘 알잖아요 저놈들까지 화면 비쳐가면서 KBS가 저렇게 다 보도하면은 전부 다 해경 저 새끼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들 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솔직히 애 선장하고 아까 그 뛰어내렸던 배 운영했던 개자식들이 거기서 보트 내려가지고 **지금 말씀 하신거 제가 참고로 하고요** 하시면 되잖아요 **전 기본적으로** 정부를 이렇게 짓밟아 가지고 되겠냐고요 직접적인 원인도 아닌데도 **기본적으로 어떤 의도도 없는 거고요** 극복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직접적인 원인도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게 그 저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또 그 이원화는 뭐예요 이원화는? **그 선박관제센터 한쪽은 해수부 소속으로 돼 있고 한쪽은 해경 소속으로 돼 있다는 그 얘기죠** 일이 터져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는 이렇게 됐지만은 다 그~ 아휴 정말~ 하여튼요 조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요 다 같이 극복을 해야 될 때구요 얼마든지 앞으로 정부 조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 있으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봐주세요 나도 정말 정말 이렇게 아니 진짜 정말 저렇게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진짜 이 회사를 이 회사 이놈들 **무슨 말씀인지 알구요 아니 이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아이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땐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일적으로 어려울 때 말이야 그렇게 과장해가지고 말이야 거기다대고 그렇게 밟아놓고 말이야 **아니 무슨 과장을 해요 과장을 하긴요~?** 과장이지 뭐니까 거기서 어떻게 앉아서 뛰어내려라 말아라 그거 잘못해가지고 이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응? 뭐 선장이고 뭐고 간에 자기들이 더 잘 아는 놈들이 자기들이 뛰어 도망나올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정도로 판단됐으면 거기서 자기들이 해야지 뛰어내려라 명령 안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건 말이죠 그걸 비난한 이유는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기대를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해경은 국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경찰인데 네 승객 안전문제 생각해야죠 몇 명 탔는지 파악하고 그 배가 50도 정도 기울었다면 무조건 탈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걸 갖다가 선장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면 안 되죠 국장님 아니 내가 진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네? 아니 거기 선장이 뛰쳐나오고 자기 목숨 구하려고 뛰쳐나올 정도 되면 배를 몇 십 년 동안 몰았던 선장 놈이 거기 앉아 있는데 보지도 않고 이거 마이크를 대고 그거 뛰어내리라고 안 했다고 뉴스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조지고 그래야 될 정도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래야 되냐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0% 30% 그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는 좀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해야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까 네 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까 네 아 진짜 국장님 좀 도와주시오 진짜 너무 진짜 힘듭니다 지금 이렇게 말이요 일어서지도 못하게 저렇게 뛰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밟아 놓으면 안됩니다. 아 좀 진짜 죽도록 잡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까. 네~ 며칠 후에요 그때가서 아주 같이먹으십시오 그냥 지금은 조금 봐 주십시오 제발 좀 봐 주십시오 조금 봐 주십시오 정말로 네 알겠습니까 네 네”

■ 2014년 4월30일 22:00경

이정현 홍보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해 KBS 9시 뉴스에서 방송된 8건의 해경 비판 보도를 23시 전후해 방송되는 심야 뉴스인 KBS 뉴스라인에서 방송되지 않도록 삭제하여 편성해 줄 것을 강압하였다. 그 결과 해경 비판 보도물이 1건 줄어서 방송되었다. 다음은 김 국장이 휴대전화로 녹음한 녹취록이다.

▷ 녹취록 RT:4분 49초 (밑줄 부분은 김시곤 국장의 말)

“나 요거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네~네 그거 그거 하나 좀 살려주시오 이게 국방부 이 사람들이 용어가 용어를 이 이거 미치겠네 하~ 어찌요? 오늘 저녁뉴스하고 내일 아침까지 나가요? 일단은 라인까지는 나가죠 뉴스라인까지 잡혀있을 거야 아마 좀 바꾸면 안 될까? 이게 그게 네~ 말하자면 이거야 이게 어디든지 누가 전체적으로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사든 어찌든 간에 일단 거기는 해군이 통제를 하는 것까지는 맞잖아요 아니 해경이~해경이 하는 거죠 해경이 일단 통제 하는 것은 맞죠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게 국방부 놈들이 말이지 아니 그런 자료를 내냐고 도대체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한심해 죽겠어 보면 진짜로 아이 씨발놈들아 내가 그랬어 아이 느그 씨발놈들아 잠깐 벗어나려고 세상에 그러니까~ 같은 다른 부처를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해경이 그걸 어쨌든 그 지역이 해경이 통제하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거기를 선이 생명줄이 선이 있으니까 이 인도선을 설치해가지고 내려가야 하는데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가야되니까 아마 거기 그 저 해경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민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해군이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에서 아까 뭐 급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온 순서대로 이렇게 투입을 아마 시키는 그런 통제를 했나봐요 근데 용어를 통제가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제를 하고 못들어가게 했다 그래버리니까 야당은 당연히 이걸 엄청 주장을 해버리지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신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 정말 아~ 근데 이제 KBS뉴스가 이걸 아주 그냥 완전히 그 일단은 조금 약간 그런 해군의 국방부의

해명이 좀 빨리 좀 안 됐나봐 난 다 못 읽어봤어 해군의 반응이요? 응~ 저기 해군이 해군이 국방부가 자기들이 아까 그렇게 보내기는 했지만은 이제 아까 그런 순서나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뭐 들어가려는 것을 방해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먼저 집어 넣으려고 자기들이 뺀 것처럼 그게 아니라 순서대로 넣으려고 말하자면 기다린 건데 이 답변대로만 하면 쪽 나오네 YTN도 해경 언딘 위해서 그쪽 수요 막아 이렇게 근데 저게 아니라는 거지 순서라는 거지 이게 (아니 근데 하여간 난 답답한 게 어떻게 정부 부처 내에서 이렇게 충돌이 나고 이렇게 엉터리 서로 비난하는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오냐고 도대체가) 아이고 나 이거 이거 정부 보고 하이고 정말 ~아이고 그것도 국방부에서 말이야 아이고 정말 아이고 아이고~ 그 투입이 돼서 다 일을 했거든 근데 순서대로 들어갔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영원히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그날 저녁에 다 투입이 됐는데 순서대로 시간에 딱딱 그거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 철저히 대기를 한 거거든 근데 왜 그게 근데 그렇게 자료를 딱 내 놓으니까 그러니까 통제라고 이렇게 써 버리니까 못 들어가게 한 것처럼 딱 순서대로 기다린거거든 그게 아이고~ 저기 뉴스라인 쪽에 내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고거 좀 이게 너무 이 군 우선은 뭐 저기 썸 저기 보도자료를 잘 못 줘서 거기다가 자료를 잘 못 줘서 그렇지 완전히 이건 순서를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고거 좀 한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나 요거 한번만 도와주시오 아주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 좀 한번만 더 해 주시오 아이고 그렇게는 안 되고 여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제가 하여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해 볼게요 내가 그래 한번만 도와줘 진짜 요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한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진짜로 하여간 어렵네 어려워 국장님 요거 한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요거 한번만 도와주고 만약 되게 되면 나한테 전화 한번 좀 해줘~ 응? 편하게 들어가세요 그래 나 오늘 여기서 잘~ 나 여기 출입처잖아 전화 좀 해줘”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 녹취록이 공개되기 이전에 이정현 전 청와대 수석과 길환영 사장을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방송편성에 개입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을 침해한 혐의로 방송법 제4조 2항과 105조 1호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

## 2. 김영한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KBS 방송 개입과 통제

故 김영한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때는 앞서 밝힌 것처럼 KBS에서 세월호 사태의 여파로 길환영 KBS 사장이 이사회에서 해임제청안이 의결되고 (2014.6.5.) 이어 박 대통령이 마지못해 해임을 최종 결정한(2014.6.10.) 직후다.

김영한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청와대가 KBS의 사장 선임과 이사장 선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와 탄압 등을 지시한 사실이 낱낱이 적혀져 있다.

김 수석의 업무일지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KBS 사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낙점(?)한 후보가 되지 않고 야당 추천 이사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사장에 선출되자 매우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급기야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당시 이길영 이사장을 물리나게 한 뒤 서둘러 이인호 씨를 후임으로 내세워 KBS 이사회를 장악해 KBS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인호 씨는 보궐 사장으로 선임된 조대현 씨를 ‘연임’이라는 당근으로 유인해 KBS를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2015년 11월 조대현 사장의 보궐 임기가 끝나자 연임보다는 보다 정권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되는 고대영 씨를 사장으로 만들었다.

김영한 수석의 업무일지에서 나타난 KBS 통제 의혹 부분을 낱짜순으로 정리하였다.

### ■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中 KBS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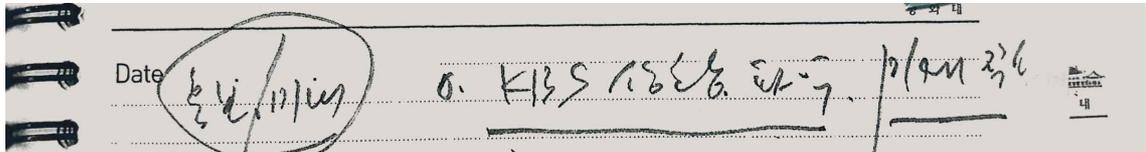
#### ▶ 6.15



6/15(9) KBS 정기이사회 - 사정인사회의 (기.까지)

6/18(수) KBS정기이사회 - 사장 임명 논의 (7/10까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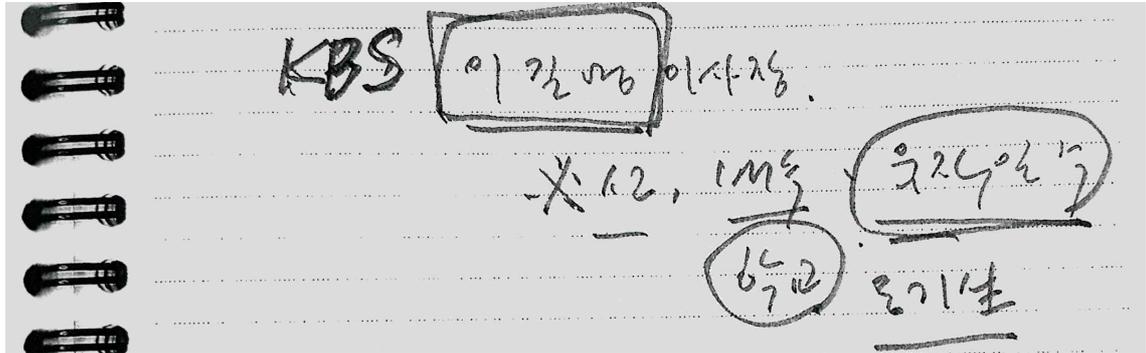
=> 2014년 6월 10일 청와대가 마지못해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받아들여 해임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 KBS 이사회는 새로운 사장(보궐임기 사장) 선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6월18일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데 방송법 제 47조 2항과 50조 6항에 따라 30일 안에 새로 사장을 뽑아야 하는 상황임을 파악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홍보/미래 KBS 상황, 파악, plan 작성

=> (비서실장 지시 사항 메모) 길환영 사장 해임 이후 KBS의 새로운 사장을 청와대 차원에서 낙점하고 향후 효율적인 통제 방안 등 PLAN(계획)을 작성하라고 홍보 및 미래전략수석에게 지시한 의혹.

▶ 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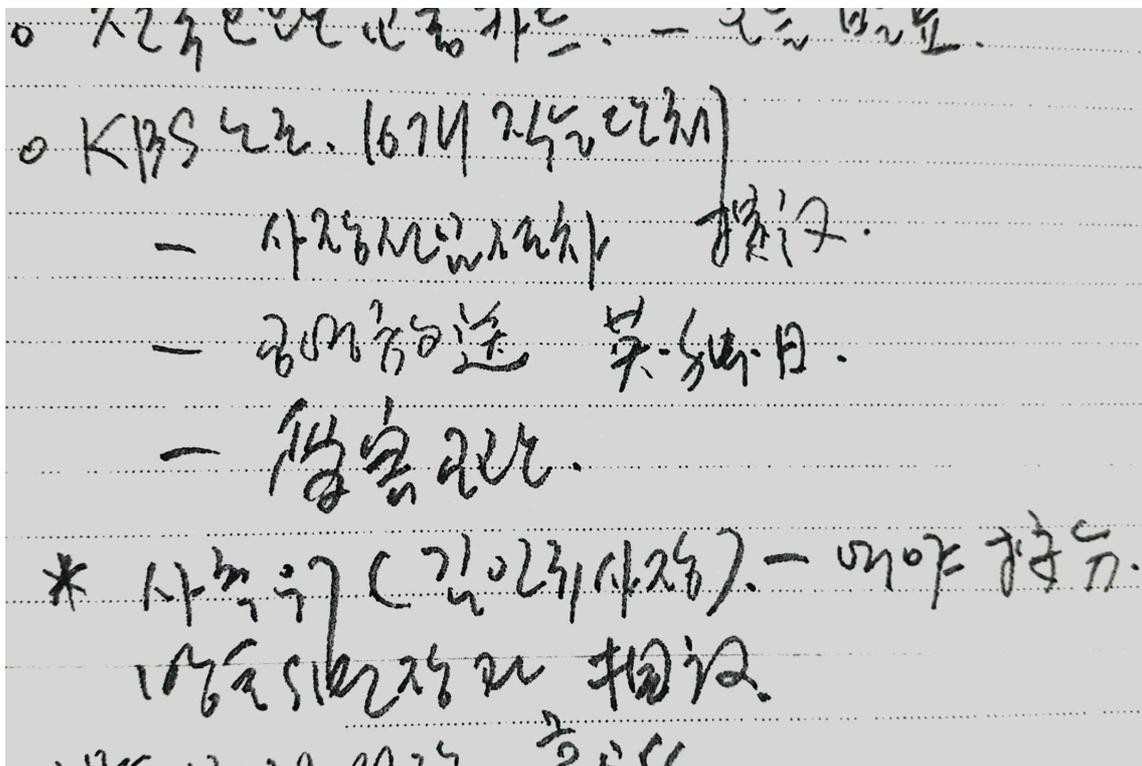
KBS 이길영 이사장

\* 선, 배들(?), 움직일 수

학교, 동기생

=> (비서실장 지시 사항 메모) 이길영 KBS 이사장과 관련한 모종(?)의 인적 네트워크를 체크해 보라는 것으로 추정된다.

▶ 6.17



Handwritten notes on lined paper:

- 사정수... (unclear)
- KBS 노조. 16개 직능단체
  - 사장선임절차 철폐.
  - 공영방송 영.독.일.
  - 수용 곤란.
- \* 사추위 (김인규사장) - 여야 합동.
- 방통위원장과 상의.

KBS 노조. 16개 직능단체

- 사장선임절차 철폐

- 공영방송 영.독.일

- 수용 곤란

\* 사추위(김인규사장) - 여야 안분

방통위원장과 상의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이 메모 전달인 6월16일 기자회견, PD협회, 경영협회 등 사내 16개 단체와 연대하여 새로운 사장 선임시에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KBS 이사회가 아닌 청와대 차원에서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미리 정한 뒤 당시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통해 수용하지 말라고 KBS 이사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새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추위 구성'과 특별다수제를 도입해보자는 요구는 이후 6월30일 열린 KBS 이사회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의 강력히 반대해 부결되었다. 이 부분은 KBS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할 공영방송 KBS의 사장 임명 제청 권한과 절차 등에 대해 청와대가 사사건건 개입하고 통제하였음을 드러낸 증거로 볼 수 있다.

▶ 6.19

◦ KBS 이사회 개최 - 법 47조 7/10까지  
6.23-30 공모

◦ 신임대추진

KBS 이사회 개최 - 법 47조 7/10까지  
6.23-30 공모

=> 새롭게 선임될 KBS 사장의 선임 절차와 임기 등에 대해 관련 법규를 체크한 것으로 보임(방송법 47조는 이사의 임기지만 사장도 동법 50조 6항에 따라 같은 47조에 의해 임기와 보궐 선임 기간이 정해짐)

▶ 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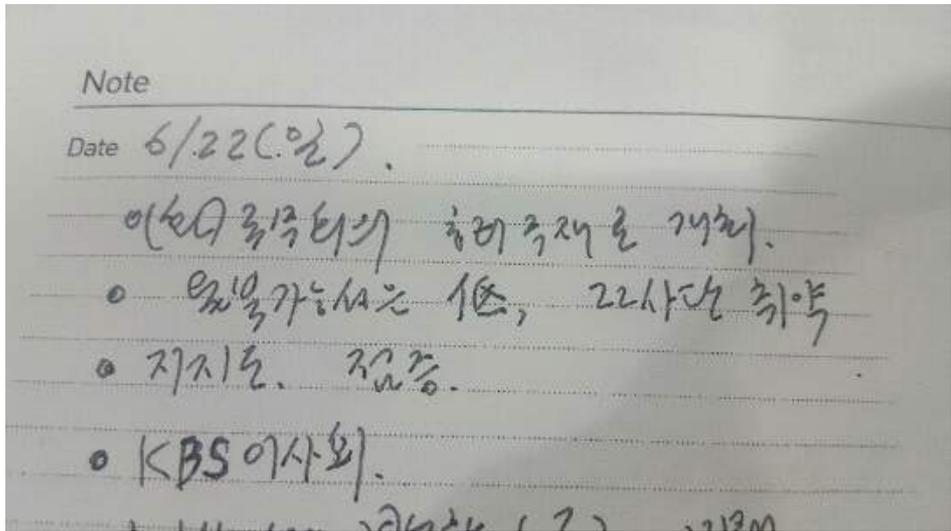
✓ ◦ 2012년 KBS 파업사건 - 법원 무죄선고  
- 노조 정세화 감독

2012년 KBS 파업사건 - 법원 무죄선고

- 노조 강성화 가속

=> 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에 대한 동향 체크 및 감시 의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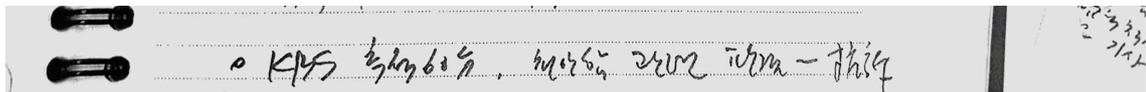
▶ 6.22



○ KBS 이사회

=> 다음날인 6월23일부터 KBS 사장 후보 공모 시작...이것과 관련해 체크한 것으로 보임.

▶ 6.26



○ KBS 추적60분 천안함 관련 판결 - 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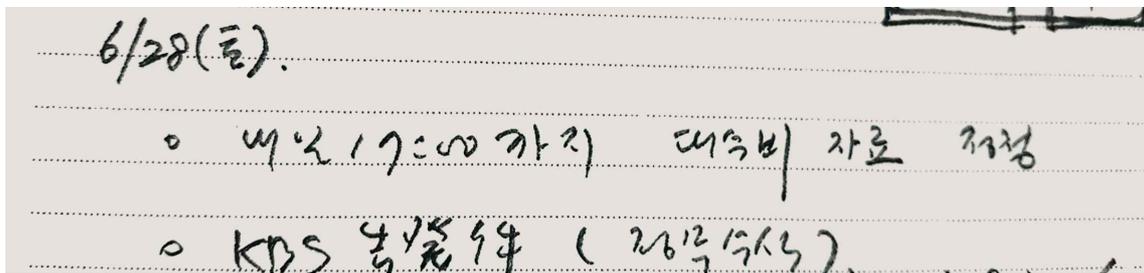
=> (비서실장 지시 사항 메모)

2010년 ‘천안함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 최종 보고서의 의문점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중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6월13일 내려졌음.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7월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음.

결국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먼저 항소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방통위가 서울고법에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임.

▶ 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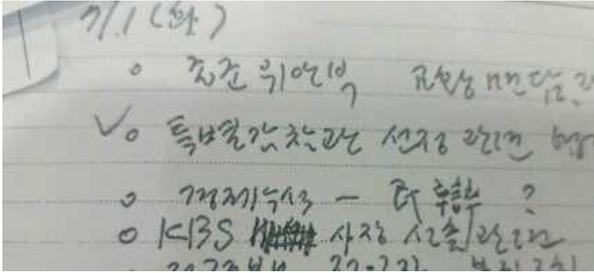


KBS 고발건 (정무수석)

=> KBS가 6월11일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친일 발언 동영상 보도를 한 이후 결국 문 후보자는 6월24일 낙마했다. 그러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월25일 KBS 보도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심의에 착수했으며, 극우단체들은 공공연히 KBS의 보도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한달 쯤 뒤인 대한민국의민연합과 애국단체총연합회 등 극우단체는 당시 KBS 보도본부장과 9시 뉴스 앵커(최영철 기자), 보도 기자(홍성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위 메모는 문창극 후보자의 낙마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KBS에 대한 고발을 기획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청와대와 극우 단체가 모종의 커넥션을 갖고 기획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언론사에 대한 탄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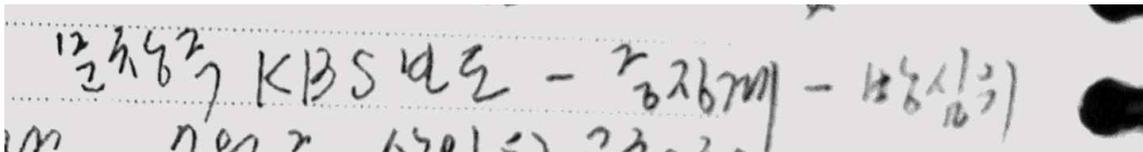
▶ 7.1



KBS 사장 선출 관련

=> KBS 새로운 사장 공모가 6월23일 시작돼 고대영, 강동순, 홍성규 등 총30명이 지원한 채 위 메모 전달인 6월30일 끝났음. 또 메모 다음 날인 7월2일 이사회가 열렸는데 30명의 후보자 가운데 6명만이 1차 투표를 거쳐 통과됐음. 따라서 6명으로 압축하기 하루 전에 청와대에서 후보들 정리와 관련한 대응이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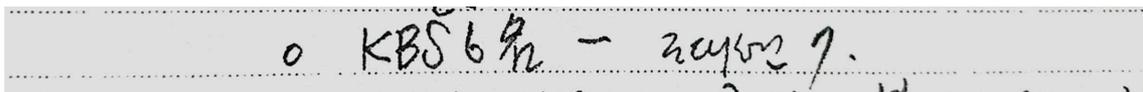
▶ 7.2



문창극 KBS보도 - 중징계 - 방심위

=>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킨 KBS 뉴스 보도와 관련해 전달인 7월1일 방심위 자문기구인 보도교양특별위원회가 경고 등의 중징계 의견을 냈으며, 방심위는 본격적으로 KBS 뉴스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다. 이에 대한 보고 혹은 대응책 논의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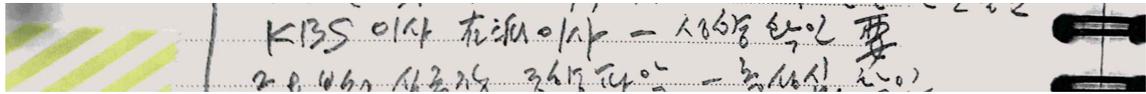
▶ 7.3



KBS 6명 - 조대현 7

=> 위 메모 전달인 7월2일 KBS 이사회는 30명의 후보자 가운데 6명만이 1차 투표를 거쳐 통과됐음. 이 과정에서 조대현 후보가 7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얻었음. KBS 이사회는 최종 후보자 6명의 명단 이외에는 아무 것도 발표한 바 없지만, 청와대는 후보 개인별 득표 현황까지 파악하고 있어 KBS 이사회 내부와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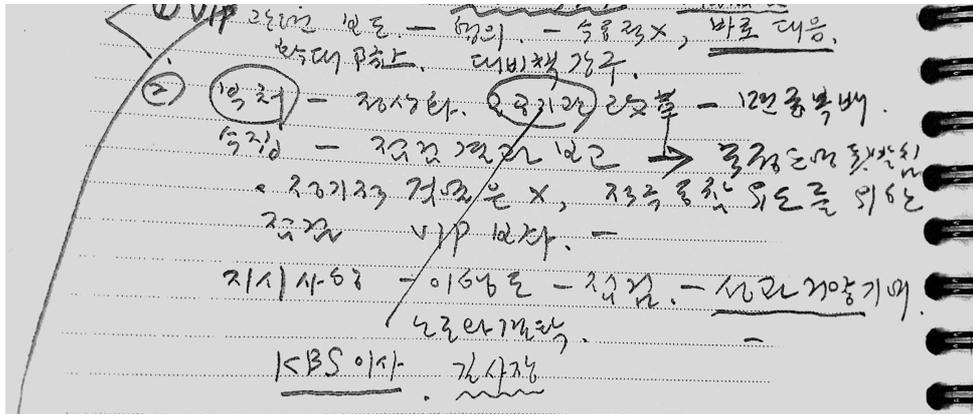


KBS 이사 우파 이사 - 성향 확인 요

=> (비서실장 지시 사항 메모)

전날인 7월3일 메모에서 1차 투표 결과 자신들이 밀고 있는 홍성규 후보자(?)가 아닌 조대현 후보자가 최다 득표를 올리자 서둘러 KBS 이사들에 대한 밀착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보임. 야당 추천 이사가 4명에 불과한데도 조대현 후보가 7표나 얻은 것의 경위를 파악토록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여당 추천 이사인 이른바 '우파 이사'들에 대한 성향을 다시 파악토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7.10



부처 - 정상화. 공공기관 개혁 - 면중복배  
수집 - 점검 결과 보고 -> 국정 운영 뒷받침  
정기적 검열은 X, 적극 동참 유도를 위한 점검 VIP 보좌  
지시사항 이행도 점검 성과 ?? 기여  
노조와 결탁  
KBS이사. 기사장

=> 위 메모 하루 전인 7월10일 여당 추천 이사 2명의 반란(?)으로 '조대현'씨가 6표를 얻어 KBS 최종 사장 후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한 메모로 보임. 공공기관 가운데 KBS이사들을 대표적인 면중복배(面從腹背)하는 사람들로 꼽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여당이 KBS 이사로 추천해서 자리까지 마련해 줬는데, 이 가운데 2명이나 오히려 청와대가 낙점한 후보가 아닌 '조대현'씨에게 표를 던져 사장으로 임명제청했다는 것. 특히 노조와 결탁하여 배신(?)했다는 등의 질책성 얘기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놓고 KBS를 마치 정권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일반 공공기관처럼 인식하고 개혁(?)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8.14



KBS, VIP 행적 보도

=> 전날 KBS 뉴스9에서 청와대가 세월호 국조특위에 밝힌 세월호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메인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관련 링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911356>

▶8.28

○ 방심위, KBS 보도(문창극) - 전체회의에 회부  
○ 中央日報 - 社説 - 韓朝 記事, - 이아계보(새로운)

방심위, KBS 보도(문창극) - 전체회의에 회부

=> 전날인 8월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KBS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보도'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음.

▶9.3

이인호 위원장 임명 내정  
이인호 위원장 임명 내정  
이인호 위원장 임명 내정

이인호 위원장 임명 내정  
위(爲) 체제수호 통제

=> (비서실장 지시 사항 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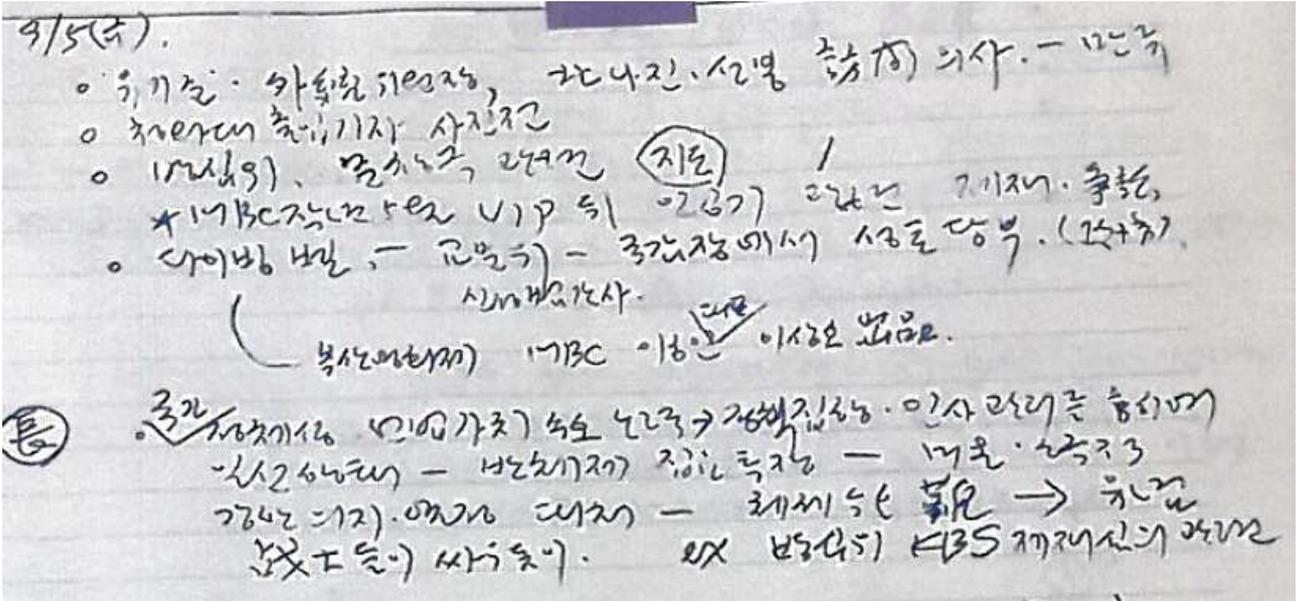
8월27일 이길영 전 이사장이 갑자기 사임했고 방통위는 마치 준비했다는 듯 재 빠르게 이틀 뒤에 이인호 씨를 KBS 이사로 추천했으며, 9월2일 청와대가 이사 임명장을 수여했음.

위 부분은 9월3일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그대로 메모한 것임. '이인호 위원장 임명 내정(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오기한 듯)하고 체제수호를 위해 통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됨. KBS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데, 실제 이인호 씨는 이 메모보다 이틀 뒤인 9월5일 열린 KBS 이사회에서 호선을 통해 이사장으로 선출됐음. 이는 청와대가 이인호 씨를 미리 이사장 자리에 내정하고 KBS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길영 이사장은 2014년 8월2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갑자기 불러 방통위 사무실로 찾아가 면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방통위원장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최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에게 밝힌 바 있다. 방통

위원장은 KBS 이사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특정 이사에게 사퇴를 종용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임.

▶9.5



방심위, 문창극 관련 지도  
...(중략)...  
장  
○ 국가 정체성.헌법가치 수호 노력 -> 정책 집행.인사 관리를 통하여  
일선행태 -반체제 집요 투쟁 - 미온.소극적  
강한 의지.열정 대처 - 체제 수호 難(?) -> 유념  
전사들이 싸우듯이 ex 방심위 KBS 제재심의 관련

=> 방송통신심위원회는 9월4일 KBS <뉴스9> 문창극 보도(6월 11일, 13일) 보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 (객관성) 위반으로 '권고'처분의 행정지도를 내렸음.

(비서실장 지시 사항 메모)

전날 방심위의 KBS문창극 보도 관련 행정지도를 예로 들며 낮은 수준의 처분 결과를 성토했고 전사들이 싸우듯이 정권을 위협하는 언론 보도에 적극 대응할 것

으로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당시 문창극 후보의 문제 발언 동영상이 KBS 뉴스를 통해 나간 뒤 총리 후보자 검증 TF에 속한 한 기자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검찰의 검사장급 고위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이 당신을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제보가 왔음. 이후 취재TF팀은 김영한 민정수석과 연락을 통해 KBS 취재진의 입장을 적극 설명한 바 있음.

▶10.15

Note

Date ○ KBS 이사장 임명 과정 181 79 10 (월)

KBS이사장 선정 과정 BH 개입(질)

=> 김기춘 비서실장 위당을 그대로 적은 메모로 알려짐.

당시 이길영 이사장이 8월27일 사임하고 이틀 뒤인 29일 방통위가 이인호 씨를 이사장으로 내정함. 그리고 9월2일에 대통령이 이인호 씨를 이사로 임명하고 9월 5일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됨. 이 메모 전달인 10월14일 야당 문병호 의원이 청와대 압력에 의해 절차까지 위반해 가며 이인호 씨가 KBS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음. 아래는 관련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14001113&md=20141015003108\\_B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14001113&md=20141015003108_BL)

괄호 안의 한자는 質로 추정됨.

### 3. 강동순 KBS 사장 후보자의 폭로를 통해 본 청와대의 KBS 사장 사전 내정 의혹

2015년 11월 조대현 사장의 보궐 임기가 끝나기에 앞서 새로운 KBS 사장 공모가 진행됐고 이인호 이사장이 이끄는 KBS 이사회는 최종 사장 후보로 고대영 씨를 임명제청하였다. 고대영 후보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임명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이 당시 함께 KBS 사장 후보에 지원했던 강동순 씨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청와대가 KBS 사장을 미리 낙점해놓고 KBS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만 했다고 폭로하였다.

강 씨의 폭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와대가 고대영 씨를 KBS 사장으로 미리 낙점해 놓고 당시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이인호 KBS 이사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회에서 고대영을 최종 임명 제청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같은 압력을 받은 이인호 이사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손병두 전 KBS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 고대영 후보에 대한 거부감 등을 언급하며 청와대의 압력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내용이 강동순 후보에게까지 전해졌고 강 씨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며 KBS 사장 선임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등 불법이 저질러졌다고 주장했지만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KBS 후임 사장에 고대영 씨가 취임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2016년 2월3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김성우 전 수석 등 청와대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비록 기각결정은 내려졌지만 실제로 김성우 홍보수석과 이인호 이사장이 서로 전화 통화를 하였고 KBS 사장 선출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 이후 이인호 이사장과 손병두 씨도 이 문제로 통화하였다는 사실이 감사원 조사 기록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인호 이사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특정인에 대한 임명 제청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상태다. 끝.

## 법조계에 대한 사찰 및 공작정치

---

송아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1. 총론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민변과 법원과 기타 변호사 단체에 대한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가 있음.

- 정권의 비판자들을 향한 공작정치와 사찰의 부활,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시도
- 국정운영은 도외시, 공작정치의 사령탑 역할에 충실했던 청와대 비서실과 행정조직의 실태
- 법치주의·민주주의적 기본질서·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행위의 자행

### 2. 각론

#### 가. 법조계 관련 사례

##### (1) 대법관 임명 관련

- 관련 업무일지 내용은 2014. 6.~7.경 집중적으로 작성. 2014. 9.경 퇴임을 앞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될 시기였음.
- 안대희 대법관 이후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법관 인선에서 잇따라 낙마하자 검찰 출신 대법관을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임.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박상옥(前 서울북부지검장)이 임명 제청·임명됨에 따라 청와대의 이 같은 의도는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임.
- 헌법(제104조 제2항)이 보장하는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행사가 청와대의 실질적 통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의혹.

## (2) 헌법재판소 결정 - 특히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관련

- 12. 19. 선고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결과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와 관련 논의까지 파악하고 있었음. 또한 정당해산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법무부 등을 동원하여 칼럼 기고를 조직하고 여론을 의식해 홍보를 강화하자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음.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의심케 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

## (3) 법원 운영 관련

- 국정원이 자행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직파간첩사건(홍강철)을 발표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2014. 9.경 무죄를 선고함.
-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법원 전체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법원조직법) 설치 등을 이용하여 법원 지도층을 길들이거나 거래하려는 방안이 시도되었다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 아울러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음.

#### (4) 개별 법관 관련

- 세월호 참사·국정원 선거개입·전교조 등 정권이 관심을 가지는 주요 사안에 대해 정권의 의도와 반대되는 판결(결정)을 내리거나 의사를 밝힌 법관에 대해 징계를 가하거나(김동진 부장판사),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사회적 제재’를 가할 것(이형주 부장판사)을 논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5) 변협 및 보수법률가 단체 관련

- 2014. 6.경 대한변협 인권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증거조작에 관여한 검찰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 개최. 이에 대해 변협 행보가 상식에 맞지 않으며, 신중한 처사를 요구하는 메모 기재됨. 또한, 대한변협 상임이사회 멤버(민경한 변호사)의 이력이 기재되어 있으며, 내부 논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변협 이사회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의혹 제기됨.
-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건전인사’, ‘합리적 인사’라는 표현으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이지 않은 인사가 회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단일화’ “애국단체 관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한 정황 포착.
- 또한 보수법률가 단체중 하나인 헌변·시변과 커넥션을 확보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정황이 포착되었음. 실제로 보수법률가 단체중 헌변·시변은 2016. 9.경 통합함.

### 나. 민변 관련 사례

#### (1) 민변 회원에 대한 징계 추진

- 직파간첩사건(홍강철)의 변호인이었던 장경옥 변호사에게 법무부 징계를 검토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후, 실제 2014. 11.경 법무부가 대한변협에 장경옥 변호사의 징계개시를 신청함. 민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추진을 보고할 것을 요

구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음.

- 기소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이 처음이었다는 점에서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기획한 징계개시신청인 동시에 민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추진이 청와대 차원에서 기획되었다는 의심이 강하게 제기됨.

## **(2) 민변 회원의 수입내역 및 자금 사찰**

- 민변 회원들이 정부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지, 회원들을 어떻게 리쿠르트하는지, 민변활동 자금을 기업이나 아름다운가게 등을 통해 조달하는지 등 민변 활동 전반에 대한 사찰이 진행됨.
- 2015. 1.경부터 다수의 언론이 검찰이 과거사 사건의 수임제한을 위반한 변호사들을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뒤인 2015. 7. 14. 민변 회원들에 대한 기소(4명)와 기소유예(2명) 조치가 이루어졌음.

## **(3) 민변 집행부 및 주요 시국사건 변호인에 대한 사찰**

- 민변 11대 집행부 회장단 및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세월호 유가족 변호인 등 민변 집행부 및 주요 시국사건 변호인들의 프로필·주요경력 등이 기재된 문건 발견.

<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중 민변·법조 언급 정리

구분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민변에 대한 부 당한 개 입 사례	6. 28.	“(황교안) ○ 변협 행보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 OO ○ 법무행정 관련 신중한 처사 해달라고 당부 ○ 첫 직선제 회장 -> 회원들에게 민감 or 취약 성향 내부에 민경한 민변 출신자가 인권위원장 -> 내부에서 발언권 강하고 대검 검찰본부장 자천 1958년생. 법무법인상록 화순. 광주고. 성대. 19기. 법무부감찰위원”	청와대가 민변 소속으로서 당시 변협 인권이사인 민경한 변호사의 이력과 성향을 확인 및 점검하고 있음.  업무일지 작성 직전인 2014. 6. 17. 대한변협 인권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음. 그 요지는 검찰도 증거조작에 관여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임.  민경한 변호사는 대한변협 상임이사회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대한문 변호사 연행사건 등에 대해 변협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음. 그런 내용이 업무일지에 담겨 있는바, 이것은 대한변협 이사회의 논의 과정을 청와대 비서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당시 민경한 변호사가 특별감찰관 후보 중의 한 명으로 거론되고는 있었지만, 성향과 고향까지 파악한 것은 지나친 정보 수집이라고 할 수 있음.
	6. 30.	“민변 한택근(61년생, 경신고-서울대 22기) 부회장 이상호(18기) 이석범(22기) 정연순 (23기)”	청와대에서 민변 11대 집행부(한택근 회장)의 이력을 파악하고 있음.
	7. 1.	“경제수석 - 민변?”	당시의 경제수석은 안종범이었음. 경제수석과 민변을 연결시켜 기재한 이유는 알 수 없음.
	8. 8.	“민변 활동 변호사 ①정부 관련사건 수임 ②리크루트 ③ 펀드(기업, 아름다운가게) ex) 교육부 지평에 의뢰”	2015. 1. 16.부터 다수의 언론이 검찰이 과거사 사건의 수임제한을 위반한 변호사들을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뒤인 2015. 7. 14. 민변 회원들에 대한 기소(4명)와 기소유예(2명) 조치가 이루어졌음.
	9. 1.	“정당해산 및 세월호 유족 측 변호사” “위헌정당해산 관련 통진당 측 주요 변호사 : 김선수, 이재화, 김	청와대가 정당해산 및 세월호 유족 측 변호사 명단(출신지역, 학력, 주요경력 포함)을 확인하고 있음. 청와대가 이들의 이력 및

		진, 이재정, 이광철” “세월호 유가족 측 주요 변호사 : 권영국, 박주민, 김용민, 오영중)	성향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임
	9. 11.	“장경욱 변 철저 고발 건 조사 - 안타깝다 - 변(호사 자격) 정지 - 법무부 징계”	업무일지 중 9. 6.자에는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홍강철 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직후에 위 사건을 맡고 있던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옴. 그리고 실제로 2014. 11. 3. 법무부가 대한변협에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였음. 특히 법무부가 문제 삼은 사건은 2012년도에 이미 마무리된 사건인데 그걸 이 때서야 문제 삼기 시작했던 것임. 업무일지 내용 중 ‘안타깝다’라는 표현은 형사사건으로 진행하지 못한 점을 두고 한 것으로 보임.
	9. 25.	“보수법률가단체 현황 - 민변, 통일 모색토록 -> 정무”	2년 뒤인 2016. 9. 8.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시변(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통합하였는바, 그 과정에 청와대 비서실의 개입이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10. 26.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요”	이 날짜 직후인 2014. 11. 5. 서울지방검찰청이 실제로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하였음.  ‘추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에서 민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단순히 법무부-검찰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 수준에서 기획되었다는 의심이 듬
	10. 4.	<장> “마을변호사 - 민변 악용 우려”	청와대가 민변 변호사들이 대한변협이 실시하고 있는 ‘마을 변호사’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 ‘마을 변호사’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밀착해서 생활법률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원 및 변호사 단체에 대한 부당한 개입 사례	6. 24.	“대법관 - 행정처장 2번 會同, 기수·지역·대표성·평판” “나이도 16기 / 충청도 3명 P·K 3명 호남 3명 일고 2명 / 양창수 제주 / 호남X” “16기 5명(김수남, 국민수(?), 이득홍, 김현웅, 임정혁)” “17기 4명(조성욱, 박성재, 김희관, 김경수)” “추천위 통해서 추진 - 법무출신 1명은 부담스럽다 - 법무부 짚대로 진행되는 듯한 인상” “재야 - 박상욱(형정원장=형사정책연구원장)	이 내용은 임기 만료를 앞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될 당시에 작성된 것임. 안대희 대법관 퇴임 이후 검찰 출신 대법관 줄줄이 사퇴하자{김병화(위장전입 등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직전 사퇴), 정병두(PD수첩·용산참사 사건 수사)} 검찰 출신 대법관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임.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그 추천 후보자는 대법원 내에 설치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청와대가 그에 개입

		하는 것은 이런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큰 문제임. 실제로 이 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박상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는바, 청와대의 의도가 관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렇다면 청와대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였는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음.
7. 7.	“보수법률단체 활용 : 헌법·시변 커넥션 확보토록”	청와대가 변호사단체를 활용해 여론을 왜곡하려고 한 조치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임.
8. 8.	“이석기 선처탄원 반대 관련 기고문 등 법원 제출”	2014. 7. 27.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과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의 대표자들이 법원에 이석기 의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이 내용은 그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 기고문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게 하겠다는 내용임  청와대가 언론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법원에 영향을 주려는 활동을 하려고 한 것 역시 위험적 행태로서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8. 23.	<장> “법원 양의원 영장기각. 믿을 수 있는 부장 OO”	
8. 25.	“통진당 사건 지원방안 마련 시행 - 재판진행상황 - 법무부 TF와 접촉 - 홍보. 여론”	청와대가 통진당 사건의 진행과 관련 정권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내용으로 보임
8. 29.	“이형주 판사 - 재임용. 영장고려사유(도주, 증거인멸) 사회적 제재 - 보수·애국단체 SNS항의, 사퇴요구”	2014. 8. 22.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불법조업하던 어선이 뒤집혀 선원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판사가 이를 기각하였음. 해경 등 국가 기관의 불법조업 묵인,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국가에도 사고 책임이 있는데, 세월호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선원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음.  청와대는 위 결정 이유 중 세월호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문제삼아 ‘보수·애국단체 SNS항의, 사퇴요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그로부터 5일 후 한 보수단

		체가 위 판사의 법관 재임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음(SBS뉴스 보도 참조).
9. 4.	“법원 영장 - 당직판사 가려 청구토록”	청와대가 당직판사의 명단과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인데 이 역시 법원에 대한 부당한 개입임.
9. 6.	“법원 지나치게 강대, 공룡화” “견제수단 생길때마다 다 찾아서 - 검찰입장” “길을 들이도록(상고법원, or) 갑일시에만” “입증의 정도. 문제 - 시대. 조건 변화” “법원 지도층과의 현하(現下) communication 강화” “홍강철의 번심이 key - 방지 위한 접촉 법원 거부감과 제재” “법원도 국가안보에 책임있다는 멘트 필요 -> 국가적 행사 때”	청와대가 상고법원을 이용하여 법원을 길들이고 법원 지도층과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헌법상의 3권분립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임.  홍강철 사건을 장경욱 변호사가 변론했는데, 그 이후인 9. 11.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 언급이 나오고 그 뒤인 11. 5. 실제 징계개시신청까지 이루어졌음.
9. 22.	(원세훈 재판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판사에 대해)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부장)”	그 이후인 2014. 12. 3. 대법원이 김동진 판사에 대해 2개월 징직 처분을 행함(법관윤리강령 위반). 이 징계는 통상의 경우보다 매우 중한 것으로 청와대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됨
9. 25.	“원세훈 판결 세미나 -> 법원 겁주기, 고급협박”	2014. 9. 24. '원세훈 김용판 과연 무죄인가?-판결분석과 진단' 토론회('새정치민주연합 국가정보원 무죄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참여연대, 민변, 민주법연 등에서 발제/토론을 맡음)에 대해 청와대가 “법원 겁주기”이자 “고급 협박”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임. 자신들은 법원에 권력적으로 개입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합법적 비판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음.
10. 11.	<장> “대한변협회장 선거 - 건전인사 선출, 단일화, 애국단체의 관여 요구됨”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 실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청와대가 대한변협 선거에까지 개입하려고 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
10. 14.	“내년 1월 대한변협회장 선거 -> 합리적 인사, 단일화”	
11. 25.	<장> “헌재 재판 - 여론전, 활동방향정립(시민사회 활용)”	청와대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를 활용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헌재에 영향을 주려는 활동을 하려고 한 것으로서 매우 심각한 위헌적 행태라고 할 수 있음.
11. 26.	“헌법학자 칼럼 기고 유도 - 법무부와 협력”	
12. 10.	“바른사회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내일 통진당 해산	

	세미나”	하는 의심이 드는 내용임.
12. 17.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의원 상실 이견 - 소장 의견 조율 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	청와대가 2014. 12. 19.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내용 및 논의 사항을 미리 알고서 언급하고 있음. 이는 헌법재판소의 논의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임

## 세월호 관련 공작정치<sup>1)</sup>

---

장동원 / 세월호 생존학생 학부모 대표

2014년 6월 14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작성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처음 접한 느낌은 참담함이었다. ‘세월호’에 대한 언급만 83일, 유병언 관련 24일, 산케이 및 7시간 관련 20여일. 대한민국 현대사에 가장 참혹하고 가슴 아픈 참사, 세월호. 청와대는 당연히 그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수습하고, 대처하며 유가족들을 보살폈어야 한다. 그러나.

### 세월호 단어 언급만 83일

불행히도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청와대와 비서실이 오직 세월호 진상규명의 은폐, 유가족들에 대한 견제와 분리, 청와대의 책임론 차단을 위해 온 힘을 다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시민사회단체, 학자들을 청와대의 잘못된 주장을 옹호하는데 동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세월호특별법과 특조위를 진상규명의 선상에서 바라보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오직 방해와 은폐의 관점에서만 거론됐다.

‘세월호 : 통화내역 제출 요구 유가족 과도한 요구’, ‘국가원수의 경호 안전상 대

---

1) 본 자료는 2016. 12. 27 < 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김진이 /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전 조사관, 팀장 발표 자료임을 밝힘.

통령의 동선을 공개할 수 없음-사생활, 국가 안보 운운은 부적절', '세월호에서 벗어나 원칙 제대로 경제 살리기 기대감', '세월호 인양 - 시신인양 ×, 정부책임, 부담'. 실종자 수습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청와대는 수시로 정부와 여당, 보수세력에 대해 은폐와 책임회피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의 세월호와 관련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방대해 분석은 소주제 6개로 나누어 진행했다. 세월호 일반적 내용과 특별법, 유가족과 피해자, 7시간 및 산케이 관련, 유병언 수사 관련, 다이빙벨 관련, 감사원 감사(세월호 관련)로 구분해 날짜별로 정리했다. 주제로 나누어 다시 모아보니 사안별로 청와대가 어떻게 사안을 바라보고, 대처했는지의 흐름을 찾아볼 수 있었다.

## 배반, 실패, 탐욕, 참사 원인 규정

우선 세월호의 참사 원인에 대해 청와대는 '선장 선원의 배반적 유기행위, 해경 초동구조 작전의 실패, 유병언 일당 탐욕(배수선 과적)(7월 8일 長)'으로 규정하고 '청와대 보고, 그 과정의 혼선×, 정부가 변명×'라며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참사의 결론을 일찌감치 내놓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을 막고, 세월호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명분이 됐다. 특별법과 제정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지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 상설 특검 활용. 특검 추천위원회(7인), 건전한 특검 임명-준비토록. 평소에 변호사 리스트, 합동 추진, 위원회 투입(長 8월 8일)', '세월호 특별법 조항별 검토의견 제시(법무)-> 독소조항, 벌칙, 역대 위원회와의 비교, 문제점, 국회에 pass토록 할 것, 長 세월호특별법 조문화. 과거사례 검토 올바른 입법되도록 영장주의. 과도한 벌칙. 유무 검토 여당 pass.(10월 1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7, 8월경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상 수사권 부여 조항 등에 대해 헌법학자들이 다수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었음에도, 특별법이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며 특별법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였다.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를 확인해보면 이것이 청와대 입장을 전달받아 충실히 행해진 정략적 반대였음을 알 수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세월호 특별법 반대 카톡 유포' 논란 이후 카톡 등 SNS를 통해 특별법을 폄하하고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유포됐다.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은 일간지에 특별법을 공격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8월 31일 업무일지에는 長 표시와 함께 '카톡

등 건전한 의견 유포 증가 추세:좌파들 위기의식->활용토록'이라고 적혀있다.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보수단체, 정부, 여당이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어떻게 방해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 **‘교황갈등 유발×’ 언론 종교계 ‘지도’**

참척의 고통을 겪은 유가족들. 마땅히 위로와 보호를 받아야할 이들을 청와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으며 대처했는가. ‘세월호 유가족(학생 유가족)의 기타 유가족 요구는 온건 합리적, 이들 입장 반영되도록 하여 중화’. 청와대는 유가족을 대 처해야할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주장을 왜곡하고, 심지어 사찰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유민아빠 김영호씨가 46일 동안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던 8월 23일에는‘자살 방조죄,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지도’라 적혀있었다. 교황 방안 당시 ‘교황방안에 언론 과잉 보도-교황갈등 유발×,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편향성 노출’, 염 추기경 발언, 같은 자세를 타 종교 지도자들도 취하도록 노력’의 내용을 통해 언론통제뿐 아니라 종교, 학계에 대한 ‘지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광범위하게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병언 수사와 관련된 내용 역시 정부의 책임회피, 이슈 전환의 목적으로 다수 거론된 것을 보인다. 6월 28일에는 이정현 전 홍보수석 관련 ‘고충토로. 특히 유병언 선거전 검거 양망. 무능정권 무능검찰’이라 적혀있다. 이후 청와대는 수시로 유병언 수사에 대해 상세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에서 문제제기했던 언론에 대한 인천지검의 티타임(수시 브리핑)과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겠다. 7월 22일 업무일지에는 ‘대대적 수색에도 불구하고 발견 못한 이유, 수사방향코멘트.(검찰)-후속조치, 아들 등 잔당 수사 관련자 책임 규명’ 등의 내용이 나온다. 7월 23일 인천지검은 유병언 검거 실패 과정과 유대균 일가 등의 처리방향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브리핑한다. 관련 브리핑은 연속해서 이어지고, 언론을 통해 유병언 보도가 홍수처럼 이어졌다.

## **유병언으로 이슈전환, 청와대가 지시?**

당시 특조위는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인 언론브리핑, 선정 보도로 인해 세월호 국면이 바로 유병언으로 이슈전환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법무부, 검찰을 통해 수사 과정과 방향,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겠다.

청와대가 세월호특별법 등과 함께 자세하게 검토한 내용이 바로 세월호특별조사 위원회다. 세월호특조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 ‘전례없는 권한이 주어진 독소조항’이라 규정했으며, 위원회 구성과 관련 대법원, 법무부와의 협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에 임명한 ‘정치지망생’은 업무일지에 거론된 김재원 의원에게 특조위 설립준비단 내부 문건을 전달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후 특조위를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했으며 예산 논란은 2016년 9월 30일 강제해산당할 때까지 특조위를 괴롭히는 보수언론, 여당의 논리가 됐다. 탄핵국면 상황에서 속속 나오고 있는 의혹과 증언, 증거들. 규명되지 못한 그날의 진실. 꼼꼼히 적은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담은 행간의 이야기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진상규명이 계속 되어야하는 이유다.

<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중 세월호 언급 정리

구분	메모일	내용	배경 및 이후 진행
세월호 및 특별 법	20140614	세월호 이후 국정과제-정리. 새장관 임명 후정리, 추진	6.13 개각으로 최경한 부총리 등 장관 임명 6/10 광주지법,이준석 선장 등 선원15명 첫 재판
	20140615	국정조사(세월호) →본인도 틈틈이 공부 중. 유비무환. 수석, 비서관 - 청와대가 단죄요청하다 사태 확대 정치적 책임은 있으나 현장, 재난본부장, 중대본, 안행부 장 관, 총리. 진평-사기	사기의 '진평'은 여론전과 선전전에 능한 인물로 알려져 있음. 세월 호에 대해 정치적 책임이 청와대로 향하지 않도록 하고자 이를 논 의하면서 '진평'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추측됨.
	20140616	세월호 당일 비서실 대응 상황 -보고 → 준비	
	20140618	이범찬 차장보고(?) 조직개편안 세월호사건	국정원 차장
	20140620	임명장 수여 후 간담회 -당부말씀3꼭지패스 1.세월호	
	20140624	(전교조 관련 내용)③ 세월호 특별법 제정	
	20140625	長 ○매일 아침회의 계속 - 자료 있는 날은 회의시간 절약, 항목 생략 - 자료없는 날 세월호 우선보고	
	20140628	長 운영위 결산보고시-인사실패, 인사위, 세월호, 추궁 예상 결산운영위 .세월호 특위기관보고. 장관 청문회→내주집중	정홍원 총리 유임
	20140702	세월호 특조 기관보고시 내용 -> 점검 요	세월호 국조에 대한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방어
	20140703	세월호 국조-김광진의원 세월호특별 법안	세월호 국조에 대한 점검->새누리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방어  세월호 국조특위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청와대와 해경교신녹취록을

		공개하고 vip가 영상만 찾아 이로 인해 해경이 다른 일을 하지 못하였다는 발언을 하였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꼬투리잡아 김광진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파행됨
20140705	해경, 현장조치 소홀 비난->해체 안전업무의 전문성 부족 발전적 해체. 병력은 증강. 해경의 자존심배려	해경이름만 해양본부로 변경. 인력 예산 오히려 증강.  박근혜 2014.5.19. 기자회견에서 해경 해체 밝힘. 관피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대신 공무원의 사기침체를 우려.
20140708	長 세월호참사원인 ◎선장선원의 배반적 유기행위 ◎해경 초동 구조 작전의 실패 ◎유병언 일당 탐욕(배수선,과적) ◎청와대 보고, 그 과정의 혼선 X ◎정부가 변명 X, 실태는 똑바로 파악	청와대 책임이 아님을 강조하려는 시도. 세월호 진상규명 및 재판결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20140711	長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20140713	長 좌익들 국가기관 진입욕구 強”, 확고한 신념을 가자. 대통령. 북 응원단 구미호 경계. 우파 지식인 결집. 우파시민단체	12일 세월호 가족버스 전국 순회 보고대회 세월호특별법을 좌익들이 국가기관에 진입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는 듯한 내용임. 우파지식이나 시민단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남
20140717	長 1.세월호 후속 법안, 정부조직법안-긴밀 협조-공유강화 소관부처법안-정례적정책협의 2.민정- 대통령기록물 생산접수자료 ip 비공개대상자료 법률적 근거, 정리. 외부노출X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부여 논란  특별법에 대한 긴밀 공조 지적하자 새누리가 수사권 부여 공격하고 연합뉴스 등 보수 언론이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기사가 많아짐. 또한 당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하여 공개를 하지 않고자 하는 논의를 함.
20140719	세월호수사성과- 종합자료-제공-당 대표, 법사위, 세월호TF, 김재원 수석, 정무. 조대현 검증-의혹91년도	4·16특별법제정촉구 범국민대회 김재원은 세월호와 관련하여 막말을 쏟아내고 이후 특조위 내부 문건 논란도 주도함
20140721	검찰총장, 법무장관-기고-세월호 특별법안 관련 김철수 교수(법무부 교섭), 최대권대근, 허영, 제성호	당시 세월호특별법이 초헌법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여론에서 밀리자 이에 대해서 헌법학자를 동원하여 지지하는 기고

		를 하고자 한 듯.
20140801	○세월호에서 벗어나 원칙 제대로. 경제살리기 기대감→보도 v○세월호 구상권 확보 철저 - 추진상황 점검 TF.	7/25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국정원 세월호 운영 개입 기자회견
20140803	○세월호특별법 상설특검 추천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실정법 활용해야.	7월28일 <여야,세월호특별법' 3대 쟁점' 놓고 충돌> 기사화
20140806	○곽노현 상대 고발(세월호 국정원 관리 운운)	
20140808	長 1.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 상설 특검 활용. 특검추천위원회(7인).건전한 특검 임명- 준비토록. pool.평소에 변호사 리스트, 합동추진, 위원회 투입.	여당 주장이 반영된 특검안과 특별법 합의 환영하는 보수언론 보도 쏟아짐.
20140812	논조 point 조정 요 ○세월호 파장-피해자가 어린 학생이기 때문임. 학교안전. 백화점 비상구(소방). 다중이용 안전 사고유의, 대비.	특별법 논란에 대한 지침?
20140818	안행부 장차관이 국가안전처 취임권. 해경 해상사고 대비가 더 철저한 것인지. 사전적 지휘.감 독. 세월호 관련 수사 상황 #표 총 164명 기소(98명 구속,66명 불구속) 총 274명 기소(144명 구속,130명 불구속)(9/16화)	교황 귀국
20140825	領 세월호 사고관련 후속점검·제재에 관심 단속방안	
20140826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구성(법안 제6조)> ○위원회는 상심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 -여야 각 5명씩 10명(상임위원여야각1명씩2명) -대법원장 2명(상임위원1명) -대한변협 2명(상임위원1명) -피해자회의 3명(상임위원1명)	

20140830	세월호 원인은 어느정도 규명 재발 방지책 정리. 감사원 재발 방지책 입수, 검찰 재방 방지책 등 각 기관별 방 책 종합정리.	8월30일 국회, 국정조사 활동 종료
20140831	카톡 등 건전한 의견 유포 증가 추세: 좌파들 위기 의식->활 용토록(8.31.)	
20140906	長 [해경의날] 관련. ○무력 보유집단이 집단 의사 표현의 곤란 김석진 해경청장 주무장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 대통령 선물, 명단 확정 후	
20140913	세월호白書-집대성하면 오히려 엇갈린 사항이 있어 빌미 대 상수사백서(검찰)연구	
20140914	전교조 계기수업(세월호)-左派 계기 수업자료 개발 세월호 상황보고(해수)-균형되게 쓰도록	전교조 세월호 교육 논란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에 대한 지적 이후 조선일보 등 비난 기 사, 교육부 징계 방안 마련
20140918	계기수업-법률 자문, 학교장·교사징계기준	
20140927	세월호 - 출석, 자료제출, 불응시 벌칙	
20141001	세월호특별법 조항별 검토의견 제시(법무) -->독소조항, 벌 칙, 역대 위원회와의 비교. 문제점. 국회에 pass토록 할 것. 長 세월호특별법 조문화. 과거사례 검토 올바른 입법되도록 영 장주의. 과도한 벌칙. 유무 검토 여당 pass.	법무부에 세월호특별법의 독소조항, 벌칙, 역대위원회와의 비교, 문 제점 등 조항별 검토의견을 제시하라고 지시하고, 해당 검토를 마친 후, 국회에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주문을 함. -> 이 때 패 스는 비교 문제점을 검토한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라는 의미이지 법 안을 통과시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임. 아래와 같이 바로 다음날 특별법 제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비교 문제점을 국회에 전달하라는 의미의 패스임. 여당과 청와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특별법상의 권 한을 약화시키는 등의 시도를 하는 모습 이후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상에서 위원회가 가지는 수사권 및 기 소권에 대하여 극렬하게 반대하며 세월호특별법의 위헌 논란을 일으 킨 후, 10.7. 해당 법안을 통과시킴.

		위원회가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가지는 경우, 그 수사 및 기소대상이 되는 대통령 및 그 측근,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바, 영장주의를 넣을 것을 요구함. (수사 및 기소대상에게 불리한)벌칙의 유무를 검토하여 새누리당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시함. ->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에게 통과시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임
20141002	초동-해임 등 48명. 안전 점검-10명 안정운항-16명, 재난 대응 체계-20 총94명(27명). 해경, 청장, 차장, 서해청장, 경비국장, 인천항 만청장 2명. 해양실장, 국토부물류 기획관  長 세월호특별법-수사, 감사-진상위 할 일. 진상규명사실을 대응 여론전. 전례없는 권한부여 조항 밝혀 조문화에 참여토록.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거부  위의 '독소조항정리'와 연관시켜보면, 특조위의 수사권 및 기소권을 '전례없는 권한'이 주어진 독소조항이라고 여겨 이를 제외시키는 조문화에 참여하도록 지침을 정한 것으로 보임.
20141011	세월호특별법 예외적인 법, 보상 형평성, 과거-미래 선례- 치밀한 검토	세월호참사 200일
20141016	국감Q&A-읽으면 되는 문서, + 보충자료 *세월호, 인사	
201041019	長 국감준비, 세월호, 인사	
20141027	11/1 세월호 200일 - 전교조 집중주간 운영 -> 위법사항 고발방침 長 세월호 인양 - 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	광주지검, 이준석 사형 구형
20141108	세월호법 관련 하태경 의원.- 주장	11월2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특별법 여야 합의안 수용 11월7일: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조직을 규정한세월호특별법 제정(2015년1월1일 시행)  하태경 의원이 11. 7.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국

			회의 특권인 청문회 권한을 가지는 점,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검찰, 사법부보다 강한 권력을 가진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함.
	20141111	세월호 관련 수색 종료-후속 조치	11월11일 세월호 수중 수색 중단 광주지법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등 선원 15명 모두 징역형 선고. 살인혐의 무죄(항소심진행)
	20141119	세월호 인양과 사고 진상규명(?)	11월19일 국민안전처 출범. 박인용 전 합참차장 장관내정.
	20141121	長 안전처장 세월호 공부 후 청문회 出	12월4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20141124	고일선 전 국장(국정원) 세월호사고 종합수사 결과 (10/6)	
	20141128	세월호진상조사위 17명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정치지망생好) *세계일보 공격 방안 *②석동현 ①조대환	정치지망생을 선호한 이유는 이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의 특조위 내 역할에 비춰 볼 때, 청와대와의 교감 등 진상규명 방해를 위한 것으로 추단
	20141219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大法院-法務部협조	12월6일 세월호유족,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이석태 변호사 선출
	20141221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大法院(法務)	세월호 특조위 위원은 유가족, 국회, 대한변협, 대법원의 각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사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청와대가 대법원 추천 위원을 거론하고 법무부 협조를 강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20150104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명단리스트(권영빈에 밀줄)	12월27일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합동영결식
유 가 족 및 피해 자 등	20140615	단원고 유가족 : 경기교육감 면담 요구사항 제기	
	20140616	세월호: 통화내역 제출 요구 유가족 과도한 요구	수사과정의 희생학생들에 대한 핸드폰 포렌식 결과 요구를 무리한

	세월호 유가족 요구 무리. 생존교사 상태 탈출 당시 상황 증언 요구. 교사2명 사의	것으로 왜곡. 세월호 당시 유가족들의 통화내역이 휴대폰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제보 많아서 통화내역을 요구하였던 바, 그에 대한 논의라고 추측됨. 유가족의 정당한 증언 요구를 왜곡.
20140617	잠수사 - 98만원	6월16일 '세월호잠수사들, 두달째 임금도 못 받았다' 보도. 이후 민경욱 대변인의 시신1구당 500만 원 등 잠수사들의 희생과 노력을 왜곡하고 돈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왜곡된 청와대의 태도가 논란이 됨.
20140621	단원고25일 등교 종교 단체 6/23(월) 시국선언	당시 6·10을 계기로 대학생, 종교단체, 노동자단체 등의 시국선언이 이어짐
20140704	해경,진상 국조특위, 유가족사칭자	유가족 2014.6.7.경부터 서명운동 시작.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2014.10.31. 사표. '유가족사칭자'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이미 상황을 왜곡해서 보고 대책을 세우는 중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후 '외부세력' 논란이 있었음.
20140720	長 검찰 세월호 사건 관계자 구속, 입건, 철저수사 중인데도 유족은 수사권 부여주장 -결과, 방지, 의지 등을 소상히 알려서 국민 납득 요망. 유병언 재청구 앞서서 중간 발표	심재철 세월호 특별법 반대 카톡 논란 7.21 어버이연합 유가족 수사권 요구 비난 기자회견
20140822	長 교황방한에 언론과잉보도- 교황갈등 유발 X, 우리 종교지도	대통령 유가족 면담 거부

	자들은 편향성 노출, 세월호 유가족(학생유가족)외 기타 유가족 요구는 온건 합리적.이들 입장 반영되도록 하여 중화.	
20140823	자살방조죄,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지도	
20140826	조선일보 보도-김영오 관련 엄추기경 발언, 같은 자세를 타종교지도자도 취하도록 노력	염수정 추기경'가족들 양보 발언 논란' 염수정 추기경 발언에 대해 다른 종교지도자들 같은 수위 발언 요구
20140829	김영오 사찰 의혹 1.병원 입원 병원장 만나 문의-사찰 2.정읍에서의 개인정보등사찰 1.8/22입원 8/20 동대문구 담당 IO동부병원 통상적 대화-병원장 이보라 과장이 주치의라 다행이다. 현실 참여. 집무태도 훌륭 죽으면 더 문제. 8/22 호송. 뉴스보고 병원장에 전화 용태문의 맥박, 혈당 낮다. 휴식. 치료 생명지장 無 2.8/22 입원일 정읍 6급공무원 인터넷검색 김영오 고향 정읍이라는 사실. 6급-이평면사무소 전화 김영오에 대하여 문의. 모친○, 학교x, 명절에만. 6급이 정읍 시장에 보고.(담당공무원) 이평면 직원이 김영오 모→아들→言論	8월29일 유민 아빠 김영오씨, 46일 만에 단식 중단  당시 김영오씨에 대한 사찰 의혹이 김영오씨 주치위에 의해 사실로 밝혀짐. 국정원은 당시 이를 부인.
20140901	<정당해산 및 세월호유족 측 변호사14.8.30(토)민정수석실(민정)> 세월호 유가족측 주요변호사 1.권영국 2.박주민 3.김용민 4.오영중	세월호 유가족 측 주요변호사들을 파악하고 민간인 사찰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의심됨. 실제 박주민의 경우2014.10.27.경 통신자료제공이 있었고 이후 본인이 통보 받음.
20140905	팽목항 잔류 실종자 가족 감정 기복 불상사 우려 위무, 치료-安定 회복토록 00부담 우려되니 유관부처 관심 가지고 대처	
20140917	김현 의원 폭행건-세월호 유족 선동·조종. 김병권, 김형기 한상철, 피(의자?) 이경찬 계기 수업 세월호 교육부, 교장허가, 교사, 교장에 대한 조치	9월17일 세월호유가족,대리기사폭행

	20140920	유가족 폭행사건-철저지휘-치아 파손	
	20140921	세월호 유가족 폭행 - 월요일 지휘-기민하게 일하도록(지휘권 확립토록)	세월호특별법 관련 안산 유가족들이 강력한 특별법 제정요구를 하고 그것이 큰 이슈가 되자 청와대에서는 세월호 유가족과 기타 유가족을 분리하여 기타 유가족편을 들듯이 태도를 취하고 그 와중에 폭행 사건이 터지자 민간에서의 단순 폭행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철저 지휘, 기민하게 일할 것 등을 운운함.
	20140922	5.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김현 의원)	
	20140930	유경근 대변인 고소 예정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 고소.
	20141002	세월호 후속-유가족 분리 용어 사용. 독소조항 정리(단원고 유가족, 일반인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을 '단원고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으로 나누어 유가족 내부의 의견 차이를 이용해 내부분열과 갈등을 유도하겠다는 의미
	20141003	長 운영위 국감-세월호 국감-대응 연구. 준비.	
	20141005	책임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적분되도록(세월호 보도자료)	
	20141007	김현 의원 사건 송치 시기-국감일자	
	20141009	미시USA-오길남, 해외 국익 훼손 불순분자 -인적사항확인, VISA 거부 등 입국차단 등 응징 필요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주장하였던 재미한인 여성커뮤니티인 미시USA 및 오길남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등 사찰 및 입국차단 등의 응징을 지시함
	20141010	블루유니온-입국거부 청원서 법무부 제출 -미시USA	사찰 및 응징을 지시한 바로 다음날, 보수단체인 블루유니온(권유미 대표)이 교포 오길남씨 등 30여명을 '국내입국거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법무부 출입국 심사국에 제출함.
	20141021	세월호 순직 교사 국가 유공자 지정 문제	
유 병 언 및 구 원 파 수 사 등	20140615	유병언 수사 - 검거, 강력한** 비호	
	20140620	유병언검거관련 -국민신뢰실추 -정보누설징계/종이징계	

20140628	이정현① 고충토로. 특히 유병언 선거전 검거 양망. '무능정권' '무능검찰'	유병언으로 책임 전환 시도  세월호와 관련한 각종 절차에서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하고, 정부와 여당이 해결책을 고민하는 대신 같이 협조하여 정치적 대응에만 고민.
20140630	統 세월호구상권→추적검거문책/검거부(양혜정(기사) 김엄마(김명숙) 박영주- 신엄마(딸)자) 받수발드는 여자 협조 유병언일가 재산 추적 방안 강구, 유병언 검거 관련회의	법무부, 세월호 사고 책임 재산 추급 회의 개최 7/1 검찰, 유전회장의 친형 유병일(75)씨 구속 기소
20140715	1. 유병언	
20140722	○대대적 수색에도 불구하고 발견 못한 이유 ○수사방향코멘트.(검찰)-후속조치 ○아들 등 잔당수사 관련자 책임 규명, 재산추적-동요없이 수행	7월21일 검찰, 진도VTS해경13명 전원 기소 7월22일 경찰, 유병언전회장 사망 발표  7월23일 인천지검브리핑. 유병언검거 실패과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해명. 수사팀장 김회중(인천지검2차장검사) "앞으로도 유대군씨를 포함한 그 일가를 신속히 사법처리하고 책임 재산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세월호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않도록 관련자들을 단죄해야하는 중차대한 과제가남아있다."
20140723	○유병언 관련 괴담 확산 → 파악 長 ○유병언 시신 40일 전 발견 신원 추단 유류품 간과한 일선서의 잘못으로 국가적 낭비 초래. 최일선 공직자 업무의 기본에 충실치 못하다는 실례. 최일선 공직자 기본숙지 해야 일이 제대로 진척.	7월23일 유병언 시신 사진 유출 후 더 커진 의혹들 발견된 시체가 유병언이 아니라는 소문이 돛.  7월23일 '유병언 끝까지 잡겠다'던 최재경 지검장 사표  23일부터 인천지검 티타임 거의 매일 구체적으로 진행. 내용 언

		론보도에 그대로 반영.
20140724	차질없이 잔여수사 사망과 유병언의 연결→	
20140803	○인천지검, 형사사건 종료. 재산(김혜경 김필배 명의로 포함) 추적. 역량 집중. 국민적 신뢰 받을 수 없어 → 해외 재산 확보 방안?	
20140805	領 유병언 수사-비호세력, 유병언 차남(유혁기)- 범죄인 인도 검경의 협력.	8월5일 인천지검 티타임에서 구상권 청구와 비호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브리핑. 관련 언론보도 쏟아짐.
20140806	유병언 영농 법인 - 실제 휴농상태 -경고(8말까지) - 처분의 무 부과 -->강제 매수 전국 6개 산재, 재산환수  8/5(화)국무회의시 <검경에 대한 당부> 지난 6월 유병언 시신 확인과정을 보면 시신이 최초 발견된 부근에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유류품 등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경이 이를 간과해서 40일간 수색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막대한 국가적 역량을 낭비했고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검찰과 경찰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서 은닉재산추적, 유병언 차남 순환 ,그리고 비호세력 등에 대해서수사에 매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20140813	長 수사결과 1.유병언 계열사 기업 비리 ○유병언 일가 5명(장남, 처, 형, 동생, 처남), 유병언 측근 5명,계열사 사장 8명 등 총 18명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유병언은 금일(8.12) 공소권없음 결정. 2.범인도피 ○도피를 원조한 구원파 신도 11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 *유병언에게 수사상황 및 여론동향 등을 편지에 적어 수시로	

	<p>보고하는 등 도피를 지휘한 유병언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 도금일 불구속 기소. 여동생 유경희는 기소 유예.</p> <p>3.책임재산 환수</p> <p>○5회에 걸친 기소전 추정보전조치를 통해, 유병언일가가 실명뿐아니라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1244억 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 동결.</p> <p>*법무부 TF 민사가압류 998원, 국세청 압류 1538억원.</p> <p>향후계획</p> <p>○향후 국외 도피중인 유병언의 자녀와 측근들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p> <p>○국내 재산, 상속 재산 뿐아니라 해외은닉 재산도 환수조치.</p> <p>○(주)세모희생과정에서 거액의 채무탕감 및 특혜대출 등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철저수사.</p>	
20140815	<p>김한식증언-유병언 최고 경영자</p> <p>유병언 책임 재산-&gt; 민사소송 대비 증거수집. 입건 후공소권 없음 결정하는 것도 고려.</p>	
20140816	<p>구원파 - 이요한 파(?)</p>	<p>유병언의 기복침과 구별되는 대한예수교침례회 이요한파</p>
20140831	<p>총리실, 추경석 실장, 유병언法 국회통과 촉구 홍보물</p> <p>유병언 재산현황←법무부에서 국무조정실에 pass토록</p>	
20140901	<p>국조실장 유병언 法 관련브리핑-법무부 세부적 차이</p> <p>유병언 재산 추적.집행 해외 재산추적상황(4500억)</p>	
20140906	<p>김혜경 - 동요- 잘 위무해서 귀국종용</p>	<p>법무부 4일 미국에서 김혜경 체포했다 발표.</p>
20140916	<p>領 김혜경-조속 귀국-진실규명-기회 法務, 검찰 김혜경 귀국시의 쟁점→은닉재산 추가 발굴 가능성</p> <p>진상규명(?)에 도움되는 건 무엇인지? 악재로 전화할 가능성? 인천지검 판단. 남은 진상과 김혜경</p>	<p>유병언 최측근이자 구원파의 '금고지기', 아이원아이홀딩스의 3대 주주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언급.</p>
20140917	<p>김혜경 관련</p>	<p>9월17일 대리기사 폭행 사건</p>
20140919	<p>김혜경 신병 관련 방침 대외공개는 곤란 -선처가능성 상존</p>	<p>피의자에 대한 대외 공개 여부, 구속, 선처 등 수사 지시에 가까운</p>

			지침을 거론하고 있음.
	20141007	김혜경 신병 일단 구속 - 협상 - 선처의 process. 長 김혜경 수사시 유병언 은닉 재산 철저 추적.	
	20141011	유병언 골프채. 보고 - 공유	12일 인천지검 유병언 50억원 골프채 정관계 로비 의혹 '사실 무근' 발표.
	20141014	유병언50억→즉시처리	
	20141112	유섬나, 유덕기, 유대권·전원자 동행	
7시간 및 산케이 소송 관련	20140718	長 4/16동선, 위치말씀-답변서 작성-문언 국가 원수, 경호신경기침 취침 직무, 경내 계신 곳이 집무 장소 경호상 알지도 알려고도 않는다 자료 제출 불가	7/18 24일 만에 세월호 실종자1명 수습. 실종자 10명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답변방향을 미리 정리한 것으로 추측됨.
	20140805	○산케이 관련 보도 -> 즉각적인 조치할 것.	8월5일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 박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가토 지국장 형사 고발 8월6일 <박대통령 사생활 의혹 보도..日매체피소> 등 기사화 8월7일 검찰, 박대통령 7시간 행적 의혹 보도 산케이 지국장 출국금지
	20140809	국가원수의 경호안전상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할 수 없음.-사생활, 국가안보 운운은 부적절	경향신문 박대통령 7시간 의혹 제기
	20140810	산케이-대통령 계셨고, 온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다. <경호관>1명 지명. 자국민 관심 표명. 외교문제 X. 특정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法). 언론자유 이름으로 국가원수 모독은 용납될 수 없다.	보수언론 뉴데일리, '산케이 옹호하는 한겨레' 등 비난 기사
	20140814	長 KBS, VIP 행적보도	8월14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세월호 유가족 위로

20140820	김경희, 김신호-敎차관 産經(산케이) 1)위법성 2)언론의자유 3)조선(?) 朝日-좌우(국내) ○주한외신기자클럽-연판장PI 外장관, 문체차관회의 주재. 정부체면 고려 대응. 과거 사례 조사 모책	8월18일 가토지국장, 검찰 출석 세월호 여야합의 논란
20140824	(형사절차관련프린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3조(형사절차 와의관계) 검토 흔적 가토다쓰야 2010.10.31입국(1년)~2011.10(1차) 2013(2차)체류기간 연장 2년씩.—2015.10.31 정윤희 전실장, 관련 보도-국민	가토에 대해 기사게재 직후인 8월 7일부터 8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기간 연장.
20140825	○가토·박지원 처리 연계-국정감사 일정변경 관련	7월 15일 長 '박지원 항소심 공소유지 대책 수립' '박사모 등 시민 단체 통해 고발'. 실제 2014년 7월 21일 새마음포럼 등 시민단체는 박지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40827	산케이처리-검찰과 의논은 곤란-관계기간 협의로 처리	
20140829	산케이처리方案논의-관계부처	
20140902	산케이 사건-외무 법무 논의	
20140918	長 ★회사차원 사과+정정보도, 국가간 문제, 재발 약속 陳 謝, 언론탄압 비판, 7시간 의혹에 대한 사법판단, 외♣, 흥 보, 변호인	
20140922	長 ○산케이 귀국 후 보고	

20140923	VIP 7시간 관련 - 주름수술설(사이버수사팀)	온라인게시판 등 통해 쌍꺼풀, 주름수술 의혹이 제기됨. 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임.
20140929	산케이 지국장 출국정지 일자(8.27->10.5)	
20141005	법무부장관 - 산케이 지국장 - 정상참작 사유 무. 내외의 언론 주시. 사대주의적 법집행은 불가 동경 아 특파원. 천황 모욕 경우. 원칙대로 처리.	
20141006	領 산케이 처리 후 후속대비 -issue화 예상. 위안부 문제 고지선점. 일정부 반전 기도에상. 언론사의 반발-국내외. 기소. 일관된 논리로 설명. 일본 및 주변국 및 언론 단체 설명.-논리.(외교)	대통령은 직접 산케이처리(기소)와 후속(언론반박)을 지시함. 이에 대하여 검찰은10.8.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산케이지국장 가토 타쓰야를 박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구속기소함.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외신기자를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어서 외교마찰 등 논란이 예상되자 해당 반박논리를 제시, 설명하라는 지시를 외교부에 내림. 이후,10.14.외교부는 '산케이지국장 기소는 외교현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냄.
20141009	산케이. 표현의 자유 운운 한계가 있다는 해명. 필요시 번역. --> 사후홍보전 충실히 하여 불법에 대한 대응임은 당당히 밝혀야. -->사실확인, 조선일보와의 차이. 개전의 정. 長 산케이 관련 외신 보도 문의. 상세히 설명. 오보 아닌 악의적 명예훼손. 대내외 홍보토록.	10월8일 검찰,가토 전지국장 불구속 기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 10월9일 일본 외무상, 유감표명.
20141010	산케이 변호인 - 박영 고소 변 -> 국내정치 전선형성(?) -->일본 반응. 격양상태. 냉정 요청. 인터넷 긍정 70%.  長 경향보도(산케이) 소회 토론	
20141028	× 長 7시간전면복원-정무→김재원의원:보도자료배포메이저언론상대 설득,홍보	10월28일 102일만에 295번째 희생자 인양 청와대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 6일 오전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후 오후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7시간여 동안 7차

			<p>례에 걸쳐 직접 또는 전화로 필요한 지시를 했다”는 관련 자료를 제출함. 그러나 보도자료에는 박대통령이 어디서 이같은 지시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음.</p> <p>같은 날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박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마치 변호라도 하듯 김기춘 비서실장과 질의를 주고 받음.</p>
	20141111	산케이 11/13→11/27 준비기일 연기	
	20150107	한겨레 정정보도 1심 기각 - 1.13 항소 VIP 팽목항 위로장면 연출	
감사원 보고 등	20140615	감사원에는 해경 수사-구조상. * 구조상 해태자(엄벌, 인사). 국정조사 전 파악-선제적 조치	감사원 5.14~6.20까지 50여명 인력투입,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 감사 실시. 감사기간 중 감사 개입 의혹
	20140709	감사원 중간 보고 - 내용 인용 - 청와대 책임	7.4 감사원 '세월호사건 중간결과 보고'받음. 감사 독립성 훼손에 대한 지적.
	20140831	長 세월호 관련 감사원-권익위 향후 계획/검찰	
	20140901	감사원장 보고 - off the Record로 할 것	
	20140902	領 감사원장 4.세월호사건-적패가 인명 피해 초래 1회성이 아닌 지속적 감사. 현장 위주 감사 잘못 용납되지 않는다는 경각심	
	20140916	세월호 감사원감사 결과-전원구조 발표 →감사원 발표 시기	
	20141008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 미리 받아 검토 comment.	10월10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서 청와대 누락 논란.
다이빙벨 관련	20140903	다이빙벨 손석희 피소 사건(업 무방해)-정부, 교문 천안함때도국감출석,웃음	다이빙벨에 대한 청와대의 집요한 관심은 세월호 실패에 대한 책임을 해경이 아닌 민간에 돌리는 민간 잠수사 업무상과실치사 기소 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며 동시에 손석희에 대한 언론탄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임.

20140905	다이빙 벨- 교문위 - 국감장에서 성토 당부(정무) 신성범 간사 부산영화제 MBC 이종인 대표 이상호 출품	청와대는 다이빙벨 상영을 막기 위해 집요하게 다이빙벨을 공격할 것을 기획, 주문했던 것으로 보임. 실제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김회선, 서용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다이빙벨 상영이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등의 납득하기 힘든 논리를 폈.
20140906	다이빙벨-다큐제작·방영- 餘他 罪責(여타 죄책?)	
20140920	<다이빙벨>상영할 것으로 예상됨→수사	
20140924	다이빙벨(부산영화제)	서병수 부산시장 다이빙벨 상영 반대 공식 입장 발표
20141022	다이빙벨상영- 대관료 등 자금원 추적 - 실제 폭로	
20141023	시네마달 내사-다이빙벨 관련	
20141119	홍성담, 다이빙벨	

## 사이버 및 민간인 사찰

---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문제점

2014년 여름, 정부는 평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사건 당시 대통령의 7시간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지 않음. 국민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름수술설을 비롯해 여러가지 가설을 제기하였음.

2014년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모독”을 거론하며 검경에 대해 사이버 허위사실에 대한 엄단을 지시함. 이틀 뒤인 9월 18일 검찰이 유관기관대책회의를 갖고 ‘공인’에 대한 모독에 ‘선제적 대응’과 ‘실시간 모니터링’ 방침을 밝힘. 이날 회의에 포털 뿐 아니라 카카오톡도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놀란 국민들의 사이버 망명이 시작됨.

갑작스럽게 많은 국민들을 당황시켰던 수사기관들의 사이버 검열의 배경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의 기획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업무일지를 통해 확인됨. 청와대 비서진은 국민 앞에 솔직한 해명보다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이를 억압하고자 했음.

청와대 비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관리하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국민들이 압수수색은 물론 추후 징역형 등 형

사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업무일지를 통해 청와대가 여러 국면에서 보수단체를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이형주 판사 등을 지목하며 ‘보수.애국단체 SNS 항의’를 통한 ‘사회적 제재’를 언급한 상황에서는 보수단체를 활용하여 인터넷 댓글 여론에 개입한 듯한 정황이 드러나는 바, 확인이 필요함.

청와대는 특히 사이버 검열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제도적으로 활용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비판 방송 보도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청와대 의중에 따라 검열하는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하였음이 드러남.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정적처럼 간주하고 폭력적으로 탄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임.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종교인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에 이르러서는 더욱 노골적임.

청와대가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한 불교계의 총무원장 선출 과정을 주시하고 세월호 시국선언 등 비판적 동향을 직접 챙겼다는 사실은 정권 차원의 종교 개입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들게 함. 특히 부정선거 비판 및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을 함께 한 천주교계에 대해서는 경찰 및 국정원이 함께 ‘우병우팀’을 구성하고 ‘뚜벅뚜벅’ ‘신부 뒷조사’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함. 청와대, 경찰, 국정원은 뒷조사를 한 천주교 신부가 누구인지 밝혀야 함.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LA 총영사관 앞에서 박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규탄 시위를 벌인 미시USA 등 교포 단체에 대하여서는 표적을 삼아 탄압함. 업무일지에는 미시USA 사찰에 이어 비자 거부 등 구체적인 ‘응징’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됨. 보수단체의 입국 거부 청원서와 청와대와의 커넥션 여부가 밝혀져야 하고 미시USA 사찰에 가담한 것으로 추측되는 국정원, 법무부, 주미 한국

대사관 등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필요.

황선 & 신은미 토크콘서트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직접 동향을 파악하며 대응을 지시하고, 아시안게임 규정에 따라 계양된 인공기나 마라톤 응원을 위해 초등학생이 직접 그려온 인공기에 대해서까지 청와대에서 일일이 문제제기하였음.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조사가 필요함.

## 2. 과제

정권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들의 표현물을 억압하기 위해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명박 정부 이후로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음. 그러나 그간 아무런 개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 국민 표현의 자유 증진과 정부 비판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폐 해소가 요구됨.

대통령 비판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어난 후, 방통통신심의위원회는 결국 명예훼손 게시물을 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통신심의규정을 개정하였음.

그러나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며 삭제 등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을 비롯한 국내외 인권기구에서 오랫동안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음. 특히 2011년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사실상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하였음. 2010년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바대로, 특별보고관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현기능을, 사법적 심사를 포함하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독립 기구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후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등 유엔 인권기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와 민간 이양에 대한 권고가 계속되어 옴.

특별보고관은 위 보고서에서 명예훼손 처벌에 대한 제도 개선도 권고한 바 있음.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하여야 한다”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은 견제와 균형의 일환으로서의 대중에 의한 감시를 수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타 유력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촉구하며, 이러한 문화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라고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음.

특히 업무일지에 허수아비 그림과 신부 뒷조사 등 민간인 사찰에 국가정보원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국정원 정치개입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함. 더불어 선거개입 논란 이후로도 무력했던 국정원 개혁특위로 인해 미완의 과제로 그친 국정원의 제도적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업무일지에 언급되어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IDC 사업자 등 민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감독과 지휘권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함. 이 법안은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말미에 테러방지법과 더불어 직권상정을 추진하였음. 20대 국회 이후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으며, 국가정보원도 직접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이라는 명의로 발의를 준비 중임. 선거와 국내정치에 개입해온 비밀정보기관에 민간 사이버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될 것임.

<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중 민간인 사찰 관련

(1) 사이버 검열과 사찰

구분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인 터 넷 '건전한 여론' 조작 개입	6. 28.	전교조 조퇴투쟁 - NAVER 댓글 비난이 대세	정부가 인터넷 여론 조작하여 '건전한 의견 유포'했을 가능성이 있음. ※ '최순실 태블릿 PC'를 개통한 김한수 행정관이 대선 기간은 물론이고 청와대에 가서도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의혹 있음.
	7. 9.	통진당 전간부 국보법 실행선고 건 - 홍보가 되도록 인터넷이라도	
	8. 29.	군산 이형주 판사 - 재임용, 영장고려 사유 (도주, 증거인멸) 사회적 제재 -> 보수.애국단체 SNS 항의. 사퇴요구	
	8. 31.	<장> 카톡 등 건전한 의견 유포 증가 추세. 좌파들 위기 의식 -> 활용토록	
청 와 대 비판 인 터넷 게 시물 탄 압과 방 함 심위 용 활	7. 17.	만만회 고발 트위트글 6건 사이버수사대 내사 지휘	청와대 비판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지시하고 검열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제도적으로 활용함. 이후 방심위는 명예훼손 게시물을 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통신심의규정을 개정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비판 방송 보도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청와대 의중에 따라 검열하는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하였음이 드러남.
	7. 21.	구글 서버 확인 (? 압수수색) - 내용 여하	
	8. 26.	다음 아고라 - 방심위 통신분야 인적 구성 약보	
	8. 27.	Daum Agora : 음란성 Parody 삭제 - 검색어 조치	
	9. 27.	서버 압수수색 - 해외 - (미래)	
	10. 2.	방심위 - 피해자본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2015. 1. 6.	<장> 인터넷 방송 피해 多 - 신고 규제가능성 검토 - 제도화	

카카오톡 감청 논 란	9. 16.	대통령 모독적 발언 (정치, 외교 -)	
	9. 16.	사이버혼란 방지, 철저규명, 재발방지 노력	
	9. 16.	사이버 단속 강화 방안. 현재 동향 - 발전적 - 개선 추세 여부. 내부 소집, 외부는? 가시적 성과로 만들 수 있는 사건은?	
	9. 16.	(검. 경에 대한 당부) 또한 지금 사이버 상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서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지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서 견잡을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버 망명을 불러 온 9월 18일 검찰의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대통령 비판 게시물을 '적폐'로 보는 청와대 지휘하에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짐. 검찰은 9월 25일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함. 검찰이 '공인'에 대한 모독에 '선제적 대응'과 '실시간 모니터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날 회의에 포털 뿐 아니라 카카오톡도 참여한 사실이 알려짐. 논란 국민들의 사이버 망명이 시작됨. ※ 검열 대상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관련 '음란성', '주름수술' 관련 설로 보임.
	9. 17.	<장> 사이버 - 적폐 발견되는대로 처벌의지 표명	
	9. 18.	17:00까지 회의. 실무자 토론회 형식. 검.경.방통위.방심위.인터넷진흥원.포탈 -> 사이버범죄수사단 / 여.야 고소.발	
	9. 18.	의지 표명 -> 적폐 일소. 발견되는대로 수사.응징 -> 비정상 의 정상화	
	9. 19.	사이버허위사실 유포 - "새로운 형태의 사회질서가 정립되는 과정의 일"	
	9. 22.	(14) 사이버 허위사실 - 수사팀 정비 - 운용방향	
	9. 23.	VIP 7시간 관련 - 주름수술설 (사이버수사팀)	
	9. 29.	사이버망명 관련 모니터링 범위 - 방통위 설명요	10월 1일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가 카카오톡 압수수색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버망명이 확대됨.
	10. 2.	집시법 위반자 - 카톡 열람 (경찰) - 한국일보	"검열 사례도 없고 의향도 없다"는 청와대 기조 하에 10월 14일, 김진태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카카오톡 검열 불가능... 논란 해소 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같은 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검열 사찰은 없다"는 메모를 들고 "오해의 표현 탓, 사과한다"고 밝힘.
	10. 3.	카카오톡 관련 우려 -> 대응 방안	
	10. 9.	카카오톡 -> 팩트에 어긋난 점 부각대응	

10. 12.	카톡 관련 법무장관 실상. 방침 보고 - 선진국과 비교	카카오톡은 10월 8일 공식사과와 해명을 발표하고 10월 13일 이석우 대표가 감청 중단을 전격 발표함.
10. 12.	<장> 사이버 망명 -> 법무. 검찰. 오해와 우려를 설득력 있게 국감에서 해명토록	
10. 13.	카톡 감청 해명시 감정적 인상 잘 고려해야 -> 제3자	
10. 13.	인터넷 감청 설비 - 비약적 증가 (미래) (1) 인터넷.휴대폰 이용 급증 (2) 전정부 시절 급증 사조 * 현황 파악 요	
10. 13.	<장> (검열) 사례도 없고 의향도 없음	
10. 14.	이석우 대표 대응 - 검토 후 발표토록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가 10월 1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여 “감청영장 협조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함. 국회에서 카톡 감청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입법’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선회함. 김진태 검찰총장은 10월 2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업체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직접 감청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힘. 검찰은 11월 4일,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 위한 연구TF팀을 설치하고 11월 12일,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는데 대해 불만을 표출함.
10. 15.	방통위 비서관 - 홍보 - 뉴미디어 비서관	
10. 15.	입법 -> 당정 -> 법무부 (카톡 감청)	
10. 15.	내일 서울고지검 국감 - 이석우 대표	
10. 15.	<장> 카톡 논란 대검회의, 불안감 해소에 유효하도록 발표전 검토 - 논란 진정 효과	
10. 16.	이석우대표 -> 실시간 감청 불가 -> 대응	
10. 16.	중앙지검 국감 중요 - 잘 설득	
10. 16.	카톡 - 국감 중앙지검 답변 - 불안과 우려 불식시키기	

	10. 20.	사이버 감청 관련 여론조사 (정무)	
	10. 20.	<장> 사이버 명예훼손 - 감청. 국민의식 괴리적 현상 실상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이런 현상 발생 -> 국감대응은 물론 광고 기타 방법으로 알리는 방안을 연구 할 것	
	10. 23.	TV조선 - 사이버망명 관련 취재	
감청 논란 이후 카카오톡 등 수사 및 사이버테러법 추진	11. 12.	다음 카카오 동향	
	11. 14.	다음 카카오 이석우 대표 - 통계수치 발표계(획). - 개인정보보호. 개인비리. 온라인뱅킹 대행 (10만원 이하)	검찰 사이버전담팀은 11월 17일, 첫 사건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린 여성을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 헐담' 유포한 남성 자택을 압수수색함.
	11. 20.	VIP 압수수색 - 인터넷 여론 엄벌 ↑	12월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와 이듬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연달아 검경에 소환되고 수사를 받음.
	11. 20.	<장> 사이버상 상습. 반복 유포 사범 - 엄단. 여론도 같음	
	12. 24.	<장> 사이버테러. 재난. 관리대응시스템 입법화	이듬해 2015년 10월, 다음카카오는 실시간 감청이 아니라 보관했다가 전달하는 방식으로 감청협조를 편법적으로 재개함. 2016년 11월, 대법원이 다음카카오의 감청협조가 위법이라고 결정하여 감청협조가 다시 중단됨. 12월 27일,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입법을 촉구하고 2016년 3월 테러방지법과 함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함.

(2) 종교계 사찰

구분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불교계	9. 12.	총무원장 직선 - 승랍 20y vs. 10y. 대립	직선제는 2013년 당선된 자승 총무원장 공약. 투표권 부여 범위에서 승랍(僧臘·출가 이후 햇수) 20년안 vs 10년안을 둘러싼 논의.

			총무원장 선출 방법은 종교계 내부 자치의 영역임. 불교계가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2014. 6.)하는 등 정권에 반대하자, 청와대가 총무원장 선출 과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제기되는 대목.
천주교	8. 7.	<장> 신부-뒷조사 경찰, 국정원 Team 구성 -> 6국 국장급	청와대가 천주교 신부에 대한 뒷조사를 경찰과 국정원 팀에 지시한 것으로 추정 청와대가 '뒷조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충격적. 스스로도 위법적인 사찰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은 직권 남용.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일. 개인의 약점을 수집하여 겁박하려는 시도로 보임 청와대는 뒷조사를 한 천주교 신부가 누구인지 밝혀야.
	9. 14.	신부. 전교조 원칙대로 처리 - 뚜벅뚜벅, 조용히	※ '6국 국장급'에 유의해야. 업무일지 다른 부분에서 6국 국장은 국정원 추모 국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추국장은 국내정보 수집 담당, 최순실 관련 정보를 안봉근과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의혹의 당사자.
	8. 27.	<장> 염추기경 발언, 같은 자세를 타 종교지도자도 취하도록 노력	염수정 추기경은 8월 26일 세월호 문제의 해법을 묻는 말에 "아픔을 해결할 때 누가 그 아픔을 이용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함. 마치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로 비춰져 논란이 됨.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모면하기 위해 추기경의 종교적 발언을 악용하여 다른 종교에도 확산시키려 시도한 것으로 보임.

(3) 민간인 사찰

구분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미시 USA 관 련	9. 23.	미국내 불법시위꾼 현황 파악 -> 홍보기획관	'미시USA'는 2013년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대사관 인턴 성추행 사건이 폭로된 재미 교민 인터넷 커뮤니티. 박대통령 뉴욕 유엔총회 참석 방미(2014. 9. 22.) 당시 '미시USA' 등 교민들 그림자 시위.

			청와대가 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위한 교민들을 ‘불법시위꾼’으로 낙인 찍고 홍보기획관에게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10. 9.	<장> 미시USA-노길남 해외 국익 훼손 불순분자 - 인적사항 확인, VISA 거부 등 입국차단 등 응징 필요 - 법무부 출입국 당국-국정원 연계	사찰에 이어 ‘응징’도 논의한 것으로 추정. 비자 거부 등 구체적으로 미시USA 관련자들 탄압. 실제로 한 보수단체가 '미시USA' 관련 인물 등에 대한 입국 거부 청원서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 제출(10월 10일). 청와대와의 커넥션 여부 밝혀져야. 미시USA 사찰에 가담한 것으로 추측되는 국정원, 법무부, 주미 한국대사관 등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필요. ※ 10월 17일로 기재된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회의 내용은 무엇인지 ▲회의 결과에 따라 무엇을 실행했는지 ▲사찰 및 불이익 피해자가 있는지 진상 규명 필요.
	10. 17.	미시 USA 관련 회의 -> 보안관	
황선 & 신은미 토크콘서트 관련	11. 22.	황선 & 신은미 토크콘서트 장소제공 관련 조치요	
	11. 25.	<장> 조계사 - 황선 장소제공 - 개입조사후 조치(자승)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문화콘서트’는 11월 19일 조계사 전통문화 예술공연장, 이후 전국 순회. 11월 21일 <문화일보> 보도 직후 청와대가 콘서트 장소를 제공한 조계사 압박 방안 논의한 것으로 추정. 방북 경험을 나누는 행사 장소를 대관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조계사를 압박했다면, 청와대의 직권 남용 ※ 명시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직접 압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진상 규명 필요
아시아게임 인공지능 기게양 관련	9. 10.	고양시 - 추석연휴 - 인공지능 기게양 - 확인요 국정원에도 알릴것 - 철거 경찰	고양시와 인천시에 인공지능 기게양이 계획. 인천아시아게임 조직위에서 설치한 45개 참가국 국기 중 하나. 논란이 되자 조직위는 ▲경기장 인근 거리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기와 대회 엠블럼 기만 내걸고 ▲참가국 국기는 경기장에만 게양 ※ 그러나, OCA 규정 58조는 “모든 경기장 및 그 부근, 본부 호텔, 선수촌과 메인프레스 센터, 공항 등에는 OCA기와 참가 올림픽위원회(NOC) 회원들의 기가 게양되어야 한다”고 규정.
	9. 10.	<장> 체제수호 : 국군장병.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 3개 기동. 추석인공지능기게양. 국보법 무력화 위한 교묘한 책동 - 강한 분	국가보안법과 냉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청와대의 인식 수준을 보여줌. 9월 11일 대검, 국정원 등 유관기관 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인공

		노. 엄한 처벌. 생존 위협하는 적군으로 관념해야. 가볍게 봐서 안돼. 막상 정상적인 기간이면 상황에 따라 부득이.	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경기장 인공기 게양은 허용
10. 8.	초등학생 인공기 - 교사 확인. 신속		10월 2일 인천아시안게임 여자 마라톤 경기에서 인공기를 들고 응원하던 초등학생 8명이 경찰의 제지를 받음. 학생들은 응원하고 싶은 나라의 국기를 각자 그려 응원하자는 교사의 제안에 따라 인공기를 그려 가지고 있던 것. 경찰은 교사와 학생 모두 인공기 소지 금지를 몰랐고 이적성이 없다고 판단 → 재발 방지 요구 뒤 훈방 경찰도 훈방한 사안에 1주일 후 청와대가 해당 교사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 ※ 해당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았는지 확인 필요.

#### 4. 국가정보원 관련

구분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국정원을 통한 공직기강 검증	6. 18.	신원검증 - 장.차관, 공공기관장 -> 국내정보	정무직 성격을 갖고 있는 장차관이나 기관장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병자하여 인사자료를 축적하는건 사실상 사찰이자, 정치개입. 국정원의 정치개입, 국내현안 개입을 대통령이 지시하였다면 국정원법 위반. 공직기강 검증에 관하여 국정원 자료가 제공된다는 점이 비서실 회의를 통하여 확인됨. 이는 국정원법 제3조의 직무범위 규정을 위배하는 것임
	7. 15.	<령> 2. 총리실 TF - 국정원 - 정치인 비리 등 거약 척결	
	7. 16.	3. 공직기강. 검증. 군검증시 기무사 자료외 국정원 자료 제공되는데 국정원에서 요구 - 균형감 필요	
국정원 관련사건 재판 대응에 청	7. 10.	김하영(국정원 여직원) 노트북 분석. 사용 닉네임, ID 발견. 자료 서울청에서 수서서(수사과장)에 넘겨주지 않았다	청와대가 법원 재판중 사안에 관하여 피고인 변호취지로 개입. ※ 7월 14일 검찰, '대선개입' 원 전 원장에 징역4년 구형. ※ 7월 22일 법원, 원 전 원장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선고.
	9. 11.	선거개입 말것. 2012. 1. 대선후보자 윤곽도 불명. 오히려	

와대 개 입		2012. 10. 감소 선거시기 이전부터 쟁점 // 선거운동의 목적성. 계획성 무	
	9. 12.	대선조작설 - 반박 - 내용. 방향 제시예정	
	9. 12.	○ 원 - 사필귀정. 특정한 낙선. 당선지시 - 상식. 채, 원 등 공소장 변경. 상식선 안되는 기소. 공소유지 난리. -> 무리. 검찰 책임 물어야. 판결문 증거검토. 항소여부 결정. 야당비난 독립성 - 지도 ○ 당과 시민단체의 강한 압박 요구됨, 예사사례 재발 방지 - 작년 국정혼란의 주범 (정치 수사.기소) ○ on-line 정치관여 ○ 으로 반감 표출	
	7. 12.	권은희 관련	국정원이 권은희 사건의 증거를 수집한 것은 직무범위 이탈
	7. 12.	권은희, 위증교사, 변(호사) ※재판기록	
국정원을 이용하여 민간인에 대한 '은 밀한' 사 찰 '응징'	8. 7.	<장> 신부-뒷조사 경찰, 국정원 Team 구성 -> 6국 국장급	민간인 사찰에 국정원이 개입하는 것은 명백히 국정원 직무범위 이탈.
	8. 7.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ex 산케이 잇으면 안된 다 - 응징해줘야 List 만들어 보고, 추적하여 처단토록 정보수 집 경찰 국정원을 팀구성토록	
	9. 23.	추명호 : 국정원 6국장 -> 8국장 (수집) 2국장 -> 7국 (분석)	8월 7일 허수아비 그림(광주, 애국단체 명예훼손 고발) 및 신부 뒷조사 를 담당했던 "경찰, 국정원(6국 국장급)"으로 구성된 "우병우팀"으로 보임
	9. 30.	<장> 국정원, 국세청, 공정위. 정보.규제 기관 음지 조용히 일하며 성과 거양 -> 언론에 정책 방향 표명 경우 운용이 경직성, 도 덕적 해이도 유발 가능 -> 은밀히 작동토록 지도	

## 청와대의 교육사찰과 전교조 탄압 공작

노병섭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사무처장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서 전교조 관련 기록은 2014년 6월 15일(일)부터 2014년 12월 1일(월)까지 170일 중 43일에 걸쳐 등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2016년 12월 5일, 청와대 직접 개입 '전교조 죽이기 공작' 증거 공개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를 언급한 42일치 기록을 발표했다, 이후 1건이 추가 발견되었다. 이는 청와대가 4일에 한 번 꼴로 전교조 동향을 점검하고 탄압을 논의했음을 의미한다(170일÷43일=3.95일). 가히 병적인 집착이라고 할 만하다. 공무원인 교사들의 노동조합에 대해 포괄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청와대가 사찰하고 개입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전교조 관련 기록은 6월에 8일, 7월에 11일, 8월에 6일, 9월에 11일, 10월에 2일, 11월에 4일, 12월에 1일 등장하는데, 특히 전교조의 법적 지위 변동과 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했던 6월, 7월, 9월에 기록이 특히 집중되어 있다. 이를테면, 2014년 9월 19일(금) 서울고등법원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 (가처분 인용)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으로써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두 번 째로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하였는데, 청와대는 이를 전후하여 9월 17일(수)부터 9월 24일(수)까지 주말을 포함해 매일 전교조 관련 상황을 확인하면서 전 방위적인 탄압을 기획하고 있다.

청와대에 의한 전교조 탄압 공작의 핵심은 ‘법외노조화’이다. 청와대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정황들이 업무일지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2015년 5월 28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또한 청와대 공작의 산물로 보는 데 무리함이 없다.

2014년 6월 20일 업무일지 기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실장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긴 process 끝에 얻은 성과”라고 말했다. 2013년 10월 24일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는 해고 교원인 조합원으로 인해 교원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합법적인 조치가 아니라, 유신 시대에 머물러 있는 퇴행적인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전교조를 터무니없이 증오하는 청와대 최고 권력자들의 은밀한 공작정치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전교조는 2016년 12월 7일 박근혜와 김기춘을 ‘직권남용’ 죄로 검찰에 형사고발했으며 대법원에 대해, 국정농단 특검이 이 부분을 수사할 것을 기대했으나 수사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이 날 박근혜와 김기춘의 직권남용 범죄 입증 자료를 대법원 특별2부에도 제출했지만,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은 대법원에 넘어간 지 1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2016년 5월을 전후해 전교조 전임자 34명이 정부의 강압으로 해고되었으며, 2017년 2월 2일 16명의 추가 전임 인정 요구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2월 7일 공문을 통해 ‘해당 없음’ 통보를 해왔다.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공작정치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 수사와 적폐청산 과정에서 미해결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전교조는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전체를 다시 검토하여, 청와대가 교육계 전반에 대해 사찰하고 교육 지배 공작을 진행한 정황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에 가 있는 안중범 전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의 업무일지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남겼을 업무일지 기록까지 확보될 경우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자행된 교육 농단과 공작은 단절성 없이 그 전모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 관련 사례는 2016년 12월 2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에서 있었던 ‘공작정치 사례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표되었고 자료집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오늘 증언대회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교사 사찰과 종북·패륜 이미지 씌우기 공작, 지방교육자치 무력화와 교육 사찰 공작,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공작과 ‘교육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증언하고자 한다.

## 1. 교사 사찰과 종북·패륜 이미지 씌우기 공작

### 1) 전교조 교사들을 ‘종북’ 과 연결

○ 2014년 10월 8일(수) 업무일지에 “초등학생 인공기 - 교사 확인. 신속”이라는 기록이 등장한다. 당시 아시안게임 응원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북한 국기를 들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전교조와 종북을 연결시키려고 확인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 당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마라톤 경기 응원에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코스는 청라신도시에서 주경기장까지 구간이었다. 급하게 요청받은 교장단은 어린이들의 응원 참여를 결정했고 인천의 C초등학교와 H초등학교는 학급별로 인터넷에서 만국기 그림들을 출력하여 초등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 중 북한 국기가 포함되어 있었고 중계 화면에 북한 국기가 노출되었던 것이다. 당시 종북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와 인터넷 게시물들이 있었다. 경찰과 교육청은 학교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면서 전교조 교사가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교장들이 경위를 해명하면서 의혹은 해소되었다. 당시 해당 학교에는 국정원-경찰-학교-교육부-교육청으로 이어지는 확인 과정이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업무일지는 이를 입증해준다. 당시 극우 성향 단체들은 북한이 아시안게임 참여에서 불참으로 바뀌었음에도 북한 국기가 타 국기들과 섞여 전시된 데 대해 항의하여 북한 국기가 철거되는 일이 있었다.

○ 보도 화면에 노출된 북한국기를 들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전교조 교사와 연결시켜 ‘공안 작품’을 만들어보려는 청와대와 공안세력의 기획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러한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촉각을 세우고 사찰을 지시했음은 가

법계 여길 일이 아니다. 당시 사찰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 전교조 교사들을 종북 세력으로 매도하는 흑색선전은 오늘날 탄핵 국면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며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내부의 적을 상정하여 집중 공격함으로써 정권을 보위하려는 공작정치의 계보는 해방 후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므로 적폐 청산의 과제라 할 것이다.

○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전교조를 종북과 연결시킨 사안에 대해 몇가지 판결들이 있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수사 과정에서 그가 전교조 등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일컬으며 이와 관련, 적극적 대응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2015년 4월 21일(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교조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세훈 전 원장과 국가는 전교조에 1천만원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사건번호 : 2013가단80410 손해배상(기)). 그러나 2심에서 “공연성”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판결이 뒤집어졌고, 2016년 9월 13일 대법원도 상고 기각 결정을 했다.

○ 또한 2015년 9월 10일(목) 대법원(민사2부)은 전교조를 ‘종북반미집단’, ‘이적단체’, ‘패륜집단’이라고 표현한 보수 단체 및 그 대표자들(반국가교육적결국민연합, 서울자교조,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김순희, 이계성, 이상진, 이연희, 배경숙)에 대하여 전교조에게 2천만원을, 소속 조합원들에게 각 3백만원,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위 판결이 있기 하루 전인 2015년 9월 9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25부)은 전교조와 전교조 교사에게 ‘종북’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던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무단공개하고 전교조를 종북집단으로 매도하는 흑색선전은 현재에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일일이 법적 대응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 ‘전교조=종북, 패륜’ 설정 공작에 청와대-국정원-보수단체가 결탁한 상황은 업무일지와 각종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은밀한 협력 속에 묻지마 식 흑색

선전 공세를 퍼부어 전교조의 이미지를 일단 부정적으로 각인시킨 후 전교조를 집중 공격함으로써 보수 내 결집을 강화하는 비열한 정치 행위는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한 2015년, 이와 같은 흑색선전이 또한 한 번 절정에 달했으며,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실험을 위한 연구학교가 전국적으로 외면당하자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에 나서 2017년 2월 10일 (금) “소위 전교조” 운운한 것도 이러한 지배 전술의 일환이다.

## 2) 전교조 교사들을 ‘패륜’ 과 연결

○ 2014년 8월 31일(일) 업무일지에 “○카톡 등 건전한 의견 유포 증가 추세, 좌파들 위기의식 → 활용토록 ○ 성추행 교사 교단 온존 : 임용 취소 → 자격 박탈 인터넷 공시 법개정 명단공개 ○ 좌익, 운동권-성적 분방, 방종. ‘도둑놈 제사 지내듯이’ ”라는 기록이 등장한다.

○ 1)에서 밝혔듯이 극우 세력은 전교조 매도를 위해 ‘종북’과 더불어 ‘패륜’으로 낙인찍기를 즐겨한다. 위 기록에 전교조가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전교조 사이의 법적 쟁송과 관련 있는 기록으로 보인다.

○ 전광훈 목사는 2012년 1월 7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1만 명 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전교조 교사들은) 국어, 산수, 사회, 자연 할 것이 없이 매 수업시간 5분 동안에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등 발언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전교조는 전광훈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2월 17일 1심에서 전교조가 승소(전광훈에 대하여 배상금 800만원 선고)했고, 2014년 7월 17일 전교조가 항소했다. 2심에서 조정 회부되었으나 전광훈 측이 조정을 거부하여 결국 판결로 가게 되었다. 2014년 7월 28일은 조정 기일이었고 2014년 10월 27일 항소 기각으로 1심 판결이 유지되어 전교조 승소로 결론이 났다.

○ 업무일지에 “좌익 운동권 성적 분방, 방종” 운운이 기록된 2014년 8월 31일 (일)은 전교조가 전광훈 목사의 망언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2심에 계류 중이었

던 때이다. 교사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라는 지시에 이어 비판 세력을 성적 문제로 음해하려는 시도가 언급된 것이다. 운동권이 성적으로 방종하다는 시각은 제5공화국 시절에나 떠돌던 낡은 유언비어 수준인데, 청와대는 2014년에도 동일한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 전교조에게 ‘비윤리적’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시도는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무단 공개했다가 거액의 배상을 해야 했던 조전혁 전 의원 관련 기록에도 등장한다. 2014년 6월 24일(화) 업무일지 상에, “전교조 비리 - 고발 접수 - 조전혁 의원. 패륜적 행태 보도”라는 기록은 언론에 전교조를 ‘패륜’으로 모는 흑색선전을 주문한 정황을 보여준다. 당시 ‘전교조-패륜’이 연결된 보도가 있었는지는 현재 잘 검색되지 않으나, 웹상에서 ‘전교조가 패륜아’라는 표현은 수없이 발견된다.

### 3) 교사와 사제들에 대한 사찰

○ 2014년 9월 14일(일) 업무일지에 기록된 “신부 전교조 원칙대로 처리 - 뚜벅 뚜벅, 조용히”라는 표현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카톨릭 사제나 전교조에 대해 은밀하면서도 집요한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앞선 8월 7일(목) “장(長). 신부-뒷조사. 경찰, 국정원 Team 구성 -> 6국 국장급”이라는 기록과 연결해 볼 때, 김기춘 실장이 천주교 신부와 함께 전교조에 대한 사찰을 국정원과 경찰에 지시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 4) 전교조 위원장 무너뜨리기

○ 2014년 9월 14일(일), “9/13(토) 전국교사대회 추가 의율 검토. 집적. 위원장 표적”이라는 기록은 2014년 9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 3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 처리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음이 드러나자, 전국교사대회를 빌미 삼아 다시 위원장을 표적 삼는 조치를 지시한 증거이다. 전국교사대회는 주말인 2014년 9월 13일 토요일에 있었다. 집회 신고가 완료된 주말의 합법 집회에 대해 법을 무리하게 적용해서라도 위원장을 표적

삼켰다는 발상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후퇴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 이에 앞선 8월 9일(토)에도 “전교조 위원장 김정훈 - 교직 박탈”이라는 기록이 등장한다. 미복귀 전임자 징계위 회부 시점의 기록이다.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해고 추진은 그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그리고 청와대의 꼭두각시인 교육부를 통해 진행되었다. 2016년 5월을 전후한 전임자 34명 해고 역시 청와대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2014년 12월 1일(월)에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전교조 위원장 선거”이라고 기록되었다. 대통령이 국정 현안 4개에 대해 지시하면서 첫 번째로 전교조 위원장 선거를 언급한 것이다. 당시 전교조 위원장과 시도지부장 선거가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있었고 3명의 후보가 경선했다. 당시 전교조는 합법 노조의 지위에 있었고, 업무일지 기록일인 12월 1일(월)은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였다. 대통령이 합법 교원노동조합인 전교조의 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가 정권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한 상황이다. 이 선거에서 17대 위원장으로 변성호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2015년 1월 13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신고 반려 공문을 발송하여 당선이 무효라고 우겼다. 전교조 규약·규정에 따라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획득하여 당선 공고한 데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총투표수’의 과반수 미획득을 내세워 당선 무효를 주장한 것이다. 노동조합 자율 규약에 따른 결정 사항에 대해 사용자인 정부가 개입한 사례로서,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전교조는 강력히 규탄했으나 새 학년도 시작 이전에 전임자를 확정해야 하는 조직 운영상의 긴박한 사정을 고려해 부득이 결선투표를 실시했고 압도적인 표차로 변성호 위원장을 당선시켰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변성호 위원장은 후보들 중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것이다.

## 2. 지방교육자치 무력화와 교육 사찰 공작

### 1) 진보 성향 교육감들에 대한 통제 공작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핵심은 교육감 직선제에 있다. 2014년 6월 5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13명이나 당선된 것은 교육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청와대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정부의 전교조 탄압 공작에 걸림돌이 되고 교육감과 전교조가 정책적으로 협력할 것을 우려하여, 중앙통제적인 교육체제로써 지방교육자치를 무력화하려는 공작을 기획하였음이 업무일지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 청와대의 이러한 공작 행위는 지방교육자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정치권력의 교육 지배를 경계한 헌법 정신에 반한다.

○ 청와대는 시도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좌파적이라거나 낭비적이라고 임의로 단정하면서 중요 교육정책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청와대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세세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 전반에 대해 사찰 행위를 진행했음이 업무일지에 드러나고 있다.

○ 청와대의 시도교육감 옥죄기와 월권행위는 2014년 뿐 아니라 2015년, 2016년을 거쳐 2017년 2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강행 국면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교육부와 교육감들 간의 갈등은 청와대 공작의 결과라 할 것이다.

## 2) 업무일지에 드러난 지방교육자치 사찰 사례들

○ 2014년 6월 20일(금) 김기춘 비서실장의 발언으로서 “전교조 지지 교육감 다수 갈등 예견. 교육부 제도적 법적 장치로 일선을 통제할 수 있는가 system 구축”이라고 된 기록은, 청와대의 지방교육자치 개입 공작의 기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2014년 6월 23일(월) “OO 인터넷매체 -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 부각 - 학부모단체 등 반대글 게재” 기록은 청와대가 보수 학부모 단체 등을 동원하여 진보적인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추진한 정황이다.

○ 2014년 7월 8일(화) “전북교육감 상대 직무이행 명령. 복귀 촉구. 징계 전 - 국가위임사무 - 법령 사례. \* 지방 자치로 인한 폐해-시정-권한 위임”이라는 기록에서 중앙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진 교육감을 ‘폐해’로 규정하고 통제를 도모한 정황이 보인다.

○ 2014년 7월 14일(월) “대외비. 령(領). 교육부 지방 재정 효율화 T/F - 교육감 좌파적 낭비 시정” 기록에서, 지방교육자치에 입각한 진보적 교육 정책들을 ‘교육감 좌파적 낭비’로 단정하고 있다. 이후 지방교육재정이 방만하다는 선전과 함께 교육부의 다양한 압박이 2015년과 2016년에 기승을 부렸다. 누리과정 파동이 그 일례이다.

○ 2014년 7월 21일(월) “충북 교육감 공판·수사 사건. 구글·서버 확인(?), 압수수색) - 내용 여하. 전교조 복귀 시한 - 내일 직권 면직 요구”이라는 기록이 있다. 2014년 7월 15일 검찰에 의한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 결과의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아마도 전교조와 교육감 선거 관련 자료도 찾고자 했을 것이나 현재까지 아무 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전교조는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전교조와 진보 성향 교육감은 분명히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청와대를 이를 하나로 인식해왔다.

○ 2014년 8월 3일(일) “장(長). 조희연, 자사고 관련 실수. 학교지원비 감액 공문. 자사고 지원 예산 다(多). 법무부 인권국장 문건 입수. 자사고. 제도 조석으로 변개되는 현실에 학부모 불안. 교육감이 이념의 실험 도구로 써서는 안돼(학생, 학부모) -> 중앙의 통제 방법 모색”이라는 기록에서 시도교육감의 세부적인 교육정책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이 꼼꼼하게 관찰하며 중앙에서 통제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2014년 8월 21일 진보적인 교육단체들의 연대체인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전면 취소 촉구 및 자사고 강행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기준점 이하라도 자사고를 유지하겠다는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의 망발이 교육부의 지정취소 부동의로 현실이 되고 있다. 나아가 교육부는 현재진행형인 서울시교육청의 평가에 대해서조차 직접 나서서 평가가 종료되었다고 휘슬을 불고 있고, 법령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는 서울시교육감에게 재량권 일탈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가 앞장서서 자사고 편들기에 나서고 있으니 실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2014년 8월 6일(수) “박원순 시장 관련 농약급식. 서울자유교원조합(서회식) -> 조희연 보호 정황. 배옥병(검) 송병춘(남편, 감사): 시민단체 고발.”이라는 기록이 있다. 당시 ‘농약급식’ 보도가 나오자 이를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 의도가 보이는 기록이다. 당시 서울자유교원조합(위원장 서회석)은 박원순 시장에게 '농약 급식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 산하 급식센터기획위원장 배모 씨와 그의 남편이자 검사관인 송모 씨를 수사 의뢰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 2014년 8월 26일(화) “인천 등 전교조 교사들 ‘장학관’으로 임명. 시행령 개정 - 장학사 경력 요구토록”이라는 기록이 있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전교조 조합원 경력을 가진 인사들을 시도교육청 장학관으로 임용하여 진보적인 교육정책 입안을 모색했는데, 이는 관련 규정에 입각한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청와대는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예 시행령 개정을 지시하고 있다. 이후 2014년 9월 4일(목)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9월초 입법예고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장학관, 교육연구관 임용 조건은 교육경력 7년에서 교장, 교감을 1년 이상 거치도록 변경되었다. 청와대가 교육감들의 인사 재량권을 옥죄기 위해 촘촘한 조치를 강구한 것이다.

○ 2014년 9월 18일(목) “서울시교육청 전교조와 우회교섭 - 법률 검토 요” 기록은 교육감과 교원노조 사이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의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이다.

○ 2014년 9월 6일(토) “자사고 취소-학부모 감사원 감사청구”, 11월 1일(토) “장(長). 자사고-교육부 장관 시정 명령-법률 소송으로. 대법원, 현재”, 11월 18일(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교육부 직권 취소→대법원에 제소. // 좌파 교육감에는 법대로 대처” 등의 기록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자신의 공약에 따라 자사고를 축소 또는 취소하려는 정책을 휘방하기 위해 보수 학부모 단체 동원, 교육부 직권취소 처분, 법적 쟁송 등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 **3.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공작과 ‘교육계 블랙리스트’**

## 1)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청와대 기획 작품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2015년 본격 강행 이전인 2014년, 또는 그 이전에 이미 청와대가 기획한 것이며, 이를 위해 여론 조작 방안도 논의한 정황이 업무일지에서 드러나고 있다.

○ 교과서는 교육과정상의 문제로서 교육부 관할 사항이지, 정치권력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철저하게 정치적 동기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다루었다.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상황과 국정화 반대하는 교사들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해 교육부 인사들에게 문의하면 종종 “윗선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는 모른다”고 대답한 이유도 국정화가 최고 권력자들의 단호한 의지에 좌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2) 업무일지 상에 넘치는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기록

○ 2014년 6월 24일(화) : “전교조 ① 범외노조 철회 ② 교원노조법 개정 ③ 세월호 특별법 제정 ④ 김명수 철회 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 2014년 8월 22일(금) : “한국사교과서 논쟁. 26일 국정 세미나. 좌파 25일 세미나. 교학사/8종 중 4종 유관순 기술무”

○ 2014년 8월 27일(수) “장(長). 국정, 검인정 국사 교과서의 문제 - boom 일으킨 이후 여론조사”라는 기록은 충격적이다. “boom 일으킨 이후 여론조사”란 국정교과서 추진을 위해 여론몰이와 여론조작을 시도한 정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하루 전인 8월 26일 교육부는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역사교과서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015년 내내 기존 검인정 교과서를 비방하는 흑색선전 공세와 이념전쟁이 보수 성향 정치권력과 단체 및 언론에 의해 수행되었고 교육부는 2015년 11월 3일 국정화 고시를 발표했다.

○ 2014년 9월 19일(금) “長. 전교조 국사교과서 관련 조직적 움직임에 모든 역

량 결집하여 대응-다각적 방안 마련”이라는 기록에서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관련 전교조 실천활동에 대해 총력 대응을 주문한 사실이 보인다. 9월 11일 전교조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중등교사 의견조사’ 보도자료(교사 90%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냈고, 9월 12일에는 전교조와 교과모임이 한국교원대에서 ‘2015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대응 전면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9월 25일에는 전교조가 ‘유신회귀 한국사 국정화 반대 ·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설치 촉구 교사선언 기자회견’을 했는데 현장교사 8,081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교과서 문제에 대해 국내의 대표적인 교원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모든 역량 결집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 2014년 9월 24일(수) “국사교과서 국정 전환 - 신념”,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 국민통합. DJ 김인정. 국회에 가서 호소노력. 설득토록”, 2015년 1월 2일(금) “교육개혁. 령(領) 1. 교육제도(수능) 2. 교과과정(국정교과서)” 등 기록에서 청와대는 이미 2014년에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양보할 수 없는 국정 과업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14년 8월 7일 국회 교육부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후보자 황우여는 “국사는 국가가 가르쳐야 국론분열 씨앗 안 뿌려”라고 발언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된 후 2015년 1월 8일에는 “역사는 한 가지로 아주 권위 있게 가르쳐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은 2015년 10월 28일 시정연설 뒤 거리에서 촛불 들고 “황우여가 국정화는 윗선 뜻이라 했다”라고 말했다. 결국 업무일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2015년 형식적인 국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밟기 이전인 2014년 혹은 그 이전에 교육부를 넘어선 청와대 최고 권력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이미 결론이 나 있었음을 보여 준다. 2017년 2월 10일(금) 현재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이 전국적으로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학교라도 신청하면 진행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이면에는 거스를 수 없는 정권의 강력한 의지가 도사리고 있다. 국정농단, 교육농단은 이 시각 현재에도 진행형인 것이다.

### **3)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한 교사들을 ‘교육계 블랙리스트’ 로 관리하여 보복**

○ 2016년 2월, 8월, 2017년 2월 퇴임교사에 대한 훈·포장과 2016년 스승의날

유공 교원 포상에서 2015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 최소 537명을 배제한 사건은 ‘교육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암시한다. ‘교육계 블랙리스트’ 관련 기록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2014년 업무일지에서 발견되지는 않지만, 사안의 성격으로 볼 때 업무일지에 드러난 공작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해된다.

○ 교육부는 2017년 2월 2일 무렵 각 시도교육청에 연락을 취하여 2017년 2월 퇴임 교원 중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할 명단을 구두로, 또는 파일 형식으로 통보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에 참여했던 전교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전교조 자체 파악에 따르면 그 규모가 93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2월 8일(수) 이후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들과 회의를 갖고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훈·포장 수여자를 확정한다는 일정이다.

○ 교육부는 2016년 2월과 8월 퇴임교원 중에서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에 참여한 146명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하지 않았으며, 2016년 스승의날 유공 교원 포상에서도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교원들 중 298명을 동일 사유로 임의 배제했다. 2016년 배제 인원은 전교조가 자체 파악한 것으로 실제 배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 훈·포장 및 포상 임의 배제 조치는 2015년 두 차례 진행되었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을 중심으로 작성한 ‘교육계 블랙리스트’를 적용한 결과로 보이며, 이 외에 달리 설명될 길이 없다. ‘교육계 블랙리스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정부의 입장에 비판적인 교원들에게 불이익과 보복을 가하기 위해 작성되었을 것이다. 교육부는 관련 지침에 따라 배제한 것이라고 역지를 부리지만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고의로 어기거나 문제의 특정 조항을 건강부회 식으로 임의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곧 직권의 남용이자 국가권력의 횡포라고 할 것이다.

○ 특히 훈·포장 임의 배제는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평생에 걸친 교육 헌신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치졸한 보복 행정이다.

○ 전교조는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정치권력의 교육침탈’로 규정하고 2015년 하반기에 국정화 반대 의견을 시국선언 형태로 두 차례 발표한 바 있다. 선언자 이름과 소속 학교를 전교조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전교조 조합원 뿐 아니라 많은 비조합원들이 선언에 적극 참여했다.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짓밟겠다는 정부의 사전 징계 겁박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수많은 교원들이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소신껏 참여한 두 차례의 선언은 가히 한국교육사에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쾌거였다. 따라서 선언 참여 교원들은 훈·포장과 포상에서 배제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히 표창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 2015년 10월 29일 1차 선언 「박근혜정권은 ‘제2유신 역사쿠데타’를 멈춰라!」 : 전국 3,976개교 21,758명 교원 참여

– 2015년 12월 16일 2차 선언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2차 교사 시국선언」 : 전국 3,544개교 16,360명 교원 참여

○ 전교조는 교육부의 빗나간 행정에 대한 1차 대응으로서 작년에 두 차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2016년 제35회 스승의날 유공 포상 임의 배제 사건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17일에, 그리고 2016년 2월과 8월 퇴임교원 훈·포상 임의 배제 사건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23일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 경위와 전교조의 입장은 다음 보도자료에 담겨 있다.

– 전교조 논평 「교육부 판 '교사 블랙리스트' 파기되어야. 퇴임교원 훈·포상 임의제외 사건 국가인권위에 진정」 (2016.11.23.수)

[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06752&page=5&menu\\_id=2010](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06752&page=5&menu_id=2010)

– 전교조 기자회견 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퇴직교원 훈·포상 임의 제외 규탄, 전교조 대응 방침 발표 기자회견」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다고 교직 평생 업적을 통째로 부정하다니!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해 교육부의 치졸한 행태를 바로잡겠다” (2016.9.9.금)

[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06290&page=4&menu\\_id=2010](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06290&page=4&menu_id=2010)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2월 7일(화) 전교조의 진정에 대한 결정문을 통지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피진정인(교육부)의 행위는 포상 등 수여

권자로서의 폭넓은 재량권을 넘어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고용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진정인(교육부)에게 각 교육청에서 징계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자에 대하여 향후 포상 등 배제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 참여 교원들에 대한 교육부의 보복 행정은 차별행위이자 인권 침해로 규정되어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 4) ‘교육계 블랙리스트’ 에 대한 입장

○ 교육부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7년 2월 퇴임교원 훈·포장 대상에서 2015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 2차 시국선언 참여 교원들을 임의로 배제하려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2016년 2월, 8월 퇴임교원 훈·포장과 2015년 스승의날 포상 대상에서 2015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들을 임의로 배제했던 조치를 취소하고 포상과 훈·포장 수여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 교육부는 ‘교육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제발 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훈·포장 및 포상 임의 배제로 피해를 입은 교원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계 블랙리스트'에 관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청와대 관련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 전교조는 훈·포장 및 포상 임의 배제를 주도한 교육부장관과 보복행정에 부역한 관련자 전원을 형법 제123조 소정의 직권남용의 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 특히 2016년에 자행된 보복행정에는 청와대 등 교육부를 넘어선 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정농단 사건 담당 특별검사에 대해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국가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와 교육부는 종종 ‘교권’을 강조해왔지만 그들이 자행한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입장 표명 교사들에 대한 치졸한 보복 행위야말로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이다.

○ 온 나라가 국정농단의 폐해를 거둬내고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고자 노력하는 마당에, ‘교육계 블랙리스트’와 ‘국정 역사교과서’ 같은 부조리가 여전한 현실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공작정치가 황교안 대행체제에 의해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교육에 대한 공작정치의 주범은 청와대이지만, 이에 부역해 온 교육부는 그야말로 한국 교육 적폐의 상징이라 할 것이다. 정치권력의 마름을 자처하여 공작정치의 꼭두각시로서 정치의 교육 지배에 동조하고 교원의 기본권을 억압함으로써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 한 교육부는 박근혜 국정농단과 적폐의 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대체해야 한다. 교육이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전교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육부 해체-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은 우리 사회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중 교육 사찰과 전교조 탄압 공작 관련 주요 기록

구분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전 교 조 법외노조 화와 전 방 위 적 탄압 공 작		☞ '공작정치 사례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2016년 12월 2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자료집 참조	
교사 사 찰과 종 북·패륜 이 미 지 씩 우 기 공작	10.8.(수)	초등학생 인공기 - 교사 확인. 신속	☞ 당시 아시안게임 응원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북한 국기를 들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전교조와 종북을 연결시키려고 확인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8.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톡 등 건전한 의견 유포 증가 추세, 좌파들 위기의식 → 활용토록</li> <li>○ 성추행 교사 교단 온존 : 임용 취소 → 자격 박탈 인터넷 공시 법개정 명단공개</li> <li>○ 좌익, 운동권-성적 분방, 방종 '도둑놈 제사지내듯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2012년 1월 7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1만 명 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전교조 교사들은) 국어, 산수, 사회, 자연 할 것이 없이 매 수업시간 5분 동안에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등으로 발언하여 무차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li> <li>☞ 전교조, 전광훈에 대해 소를 제기(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014.2.17.1심 전교조 승소 (전광훈에 대하여 배상금 800만원 선고), 2014.7.17. 전교조 항소, 2심에서 조정 회부, 전광훈 측이 조정 거부. 결국 판결로 가서 전교조 승소. 2014. 7. 28. 조정기일. 2014. 8. 31. 업무일지에 좌익 운동권 성적 분방 방종 운운 기록 등장. 2014. 10. 27.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전교조 승소)</li> <li>☞ 업무일지 기록 당시 전교조가 전광훈 목사의 망언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2심 계류 중이었음. 교사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라는 지시에 이어 비판 세력을 성적 문제로 음해하려는 시도 언급. 운동권이 성적으로 방종하다는 시각은 5공 시절에나 떠돌던 낡은 유언비어 수준인데 청와대는 2014년에도 동일한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음.</li> </ul>
	9.14.(일)	○ 신부 전교조 원칙대로 처리 - 뚜벅뚜벅, 조용히	☞ 카톨릭 사제와 전교조에 대한 사찰과 탄압을 암시. 8.7.(목) 기록과 연결해 볼 때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

8.7.(목)	<p>&lt;장&gt;  신부-뒷조사  경찰, 국정원 Team 구성 -&gt; 6국 국장급</p>	☞ 카톨릭 사제 사찰에 국정원과 경찰 동원
9.14.(일)	○ 전교조 계기 수업 (세월호) - 우파 계기 수업자료 개발 9/13(토) 전국교사대회 추가 의율 검토. 집적. 위원장 표적	☞ 2014년 9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 3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 처리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음이 드러나자, 전국교사대회를 발미 삼아 다시 위원장을 표적 삼는 조치를 지시한 증거. 전국교사대회는 주말인 2014년 9월 13일 토요일에 있었다. 집회 신고가 완료된 주말의 합법 집회에 대해 법을 무리하게 적용해서라도 위원장을 표적 삼겠다는 발상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후퇴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8.9.(토)	○ 전교조 위원장 김정훈 - 교직 박탈	☞ 미복귀 전임자 징계위 회부 시점의 기록이다.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해고 추진은 그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그리고 청와대의 꼭두각시인 교육부를 통해 진행되었다. 2016년 5월을 전후한 전임자 34명 해고 역시 청와대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2.1.(월)	령(令) ○ 전교조 위원장 선거	☞ 대통령이 국정 현안 4개에 대해 지시하면서 첫 번째로 전교조 위원장 선거를 언급. 당시 전교조 위원장과 시도지부장 선거가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있었고 3명의 후보가 경선했다. 당시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에 있었고, 업무일지 기록일인 12월 1일(월)은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였다. 대통령이 합법 교원노동조합인 전교조의 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가 정권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한 정황이다. ☞ 이 선거에서 17대 위원장으로 변성호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2015년 1월 13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신고 반려 공문을 발송하여 당선 무효라고 우겼다. 전교조 규약규정에 따라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획득하여 당선 공고한 데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총투표수'의 과반수 미획득을 내세워 당선 무효를 주장한 것이다. 노동조합 자율 규약에 따른 결정 사항에 대해 사용자인 정부가 개입한 사례로서,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전교조는 강력히 규탄했으나 새 학년도 시작 이전에 전임자를 확정해야 하는 조직 운영상의 긴박한 사정을 고려해 부득이 결선투표를 실시했고 압도적인 표차로 변성호 위원장을 당선시켰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변성호 위원장은 후보들 중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것이다.

지방교육 자치 무 력 화 와 교육 사 찰 공작	6.20.(금)	장(長) ○ 전교조 지지 교육감 다수 갈등 예견 * 교육부 제도적 법적 장치로 일선을 통제할 수 있는가 system 구축 - 저항 : 半합법, 비합법 혼합, 강력한 의지로 법집행, 전교조 생존 문제로 경시할 수 없어 - 국제적 연계 정부 압박 긴 process 끝에 얻은 성과 엠네스티, ILO, 대사들로 숙지토록	☞ 2014년 6월 5일 진보 성향 교육감 13인 당선에 따라 위기 의식을 느낀 청와대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정부의 전교조 탄압 공작에 걸림 돌이 되고 교육감과 전교조가 정책적으로 협력할 것을 우려하여, 중앙 통제적인 교육체제로써 지방교육자치를 무력화, 통제하는 체계적 방안을 모색한 정황으로, 지방교육자치 개입 공작의 기초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6.23.(월)	OO 인터넷매체 -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 부각 - 학부모단체 등 반대글 게재	☞ 청와대가 보수 학부모 단체 등을 동원하여 진보적인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추진한 정황이다.
	7.8.(화)	○ 전북교육감 상대 직무이행 명령. 복귀 촉구 징계 전 - 국가위임사무 - 법령 사례 * 지방 자치로 인한 폐해-시정-권한 위임	☞ 중앙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진 교육감을 '폐해'로 규정하고 통제를 도모한 정황이 보인다.
	7.14.(월)	대외비 령(令) ○ 교육부 지방 재정 효율화 T/F - 교육감 좌파적 낭비 시정.	☞ 지방교육자치에 입각한 진보적 교육 정책들을 '교육감 좌파적 낭비'로 단정하고 있다. 이후 지방교육재정이 방만하다는 선전과 함께 교육부의 다양한 압박이 2015년과 2016년에 기승을 부렸다. 누리과정 파동이 그 일례이다.
	7.21.(월)	2014.7.21.(월) ○ 충북 교육감 공판·수사 사건 ○ 구글·서버 확인(? , 압수수색) - 내용 여하 ○ 전교조 복귀 시한 - 내일 직권 면직 요구	☞ 2014년 7월 15일 검찰에 의한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 결과의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아마도 전교조와 교육감 선거 관련 자료도 찾고자 했을 것이나 현재까지 아무 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전교조는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전교조와 진보 성향 교육감은 분명히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청와대를 이를 하나로 인식해왔다.
	8.3.(일)	장(長) ○ 조희연, 자사고 관련 실수. 학교지원비 감액 공문 자사고 지원 예산 다(多) ○ 법무부 인권국장 문건 입수 ○ 자사고. 제도 조석으로 변개되는 현실에 학부모 불안.	☞ 시도교육감의 세부적인 교육정책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이 꼼꼼하게 관찰하며 중앙에서 통제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 2014년 8월 21일 진보적인 교육단체들의 연대체인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전면 취소 촉구 및 자사고 강행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기준점 이하라도 자사고를 유지하겠다는 문

	교육감이 이념의 실험도구로 써서는 안돼(학생, 학부모) -> 중앙의 통제 방법 모색	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의 망발이 교육부의 지정취소 부동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 나아가 교육부는 현재진행형인 서울시교육청의 평가에 대해서조차 직접 나서서 평가가 종료되었다고 휘슬을 불고 있고, 법령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는 서울시교육감에게 재량권 일탈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가 앞장서서 자사고 편들기에 나서고 있으니 실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8.6.(수)	박원순 시장 관련 농약급식. 서울자유교원조합(서희석) -> 조희연 보호 정황. 배옥병(검) 송병춘(남편, 감사): 시민단체 고발	☞ 당시 ‘농약급식’ 보도가 나오자 이를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 의도가 보이는 기록이다. 당시 서울자유교원조합(위원장 서희석)은 박원순 시장에게 ‘농약 급식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 산하 급식센터기획위원장 배모 씨와 그의 남편이자 검사관인 송모 씨를 수사 의뢰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8.26.(화)	○ 인천 등 전교조 교사들 ‘장학관’으로 임명 시행령 개정 - 장학사 경력 요구토록	☞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전교조 조합원 경력을 가진 인사들을 시도교육청 장학관으로 임용하여 진보적인 교육정책 입안을 모색했는데, 이는 관련 규정에 입각한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 청와대는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예 시행령 개정을 지시하고 있다. 이후 2014년 9월 4일(목)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9월초 입법예고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장학관, 교육연구관 임용 조건은 교육경력 7년에서 교장, 교감을 1년 이상 거치도록 변경되었다. 청와대가 교육감들의 인사 재량권을 옥죄기 위해 촘촘한 조치를 강구한 것이다.
9.18.(목)	9.18.(목) ○ 계기 수업 - 법률 자문, 학교장, 교사 징계 기준 장(長) ○ 서울시 교육청 전교조와 우회 교섭 - 법률 검토 요	☞ 교육감과 교원노조 사이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의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이다.
9.6.(토)	자사고 취소-학부모 감사원 감사청구	☞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자신의 공약에 따라 자사고를 축소 또는 취소하려는 정책을 휘방하기 위해 보수 학부모 단체 동원, 교육부 직권 취소 처분, 법적 쟁송 등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 2014.10.31. 서울교육청 자사고 6개교 지정 취소(경희, 배제, 세화, 우신, 이대부고, 중앙고), 2개교 유예(송문, 신일) → 교육부, 직권 취소 → 2016년 현재까지 재판 진행 중 ☞ 민주진보교육감을 “좌파교육감”으로 규정하고 법적 탄압 주문
11.1.(토)	장(長) ○ 자사고 - 교육부 장관 시정 명령- 법률 소송으로 • 대법원, 현재	
11.18.(화)	○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교육부 직권 취소 → 대법원에 제소. // 좌파 교육감에는 법대로 대처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공작과 '교육계 블랙리스트'	6.24.(화)	○ 전교조 ① 범외노조 철회 ② 교원노조법 개정 ③ 세월호 특별법 제정 ④ 김명수 철회 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8.22(금)	“한국사교과서 논쟁. 26일 국정 세미나. 좌파 25일 세미나. 교학사/8종 중 4종 유관순 기술무”	
	8.27.(수)	장(長) ○ 국정, 검인정 국사 교과서의 문제 - boom 일으킨 이후 여론조사	☞ “boom 일으킨 이후 여론조사”란 국정교과서 추진을 위해 여론몰이와 여론조작을 시도한 정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하루 전인 8월 26일 교육부는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역사교과서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015년 내내 기존 검인정 교과서를 비방하는 흑색선전 공세와 이념전쟁이 보수 성향 정치권력과 단체 및 언론에 의해 수행되었고 교육부는 2015년 11월 3일 국정화 고시를 발표했다.
	9.19.(금)	장(長) ○ 전교조 국사교과서 관련 조직적 움직임에 모든 역량 결집하여 대응 - 다각적 방안 마련	☞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관련 전교조 실천활동에 대해 총력 대응을 주문한 사실이 보인다. ☞ 9월 11일 전교조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중등교사 의견조사’ 보도자료(교사 90%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냈고, 9월 12일에는 전교조와 교과모임이 한국교원대에서 ‘2015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대응 전면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9월 25일에는 전교조가 ‘유신회귀 한국사 국정화 반대·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설치 촉구 교사선언 기자회견’을 했는데 현장교사 8,081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 교과서 문제에 대해 국내의 대표적인 교원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모든 역량 결집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9.24.(수)	장(長) ○ 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 신념 ○ 전교조 관련 탄원서. 다다익선 ○ 현재에 전교조 제기 헌소 등 2건 동시 계류 - 고용노동부 지원 장(長) ○ 국사교과서 국정화 - 국민 통합. DJ 검인정 국회에 가서 호소노력. 설득토록	☞ 청와대는 이미 2014년에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양보할 수 없는 국정 과업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2014년 8월 7일 국회 교육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황우여는 “국사는 국가가 가르쳐야 국론분열 씨앗 안 뿌려” 라고 발언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된 후 2015년 1월 8일에는 “역사는 한 가지로 아주 권위 있게 가르쳐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은 2015년 10월 28일 시정연설 뒤 거리에서 촛불 들고 “황우여가 국정화는 뒷선 뜻이라 했다”라고 말했다.
	2015. 1.2.(금)	2015년 1월 2일(금) “교육개혁. 령(領) 1. 교육제도(수능) 2. 교과과정(국정교과서)”	☞ 결국 업무일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2015년 형식적인 국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밟기 이전인 2014년 혹은 그 이전에 교육부를 넘어선

			<p>청와대 최고 권력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이미 결론이 나 있었음을 보여준다.</p> <p>☞ 2017년 2월 10일(금) 현재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이 전국적으로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학교라도 신청하면 진행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이면에는 거스를 수 없는 정권의 강력한 의지가 도사리고 있다. 국정농단, 교육농단은 이 시각 현재에도 진행형인 것이다.</p>
--	--	--	--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발행일 2017. 2. 13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의원(국민의당), 추혜선의원(정의당),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

담당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02-723-5302 tsc@pspd.org



박근혜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